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책임연구원 :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임성택(강원대학교·교수)

주동범(부경대학교·교수)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시리즈

일련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진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 황진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임성택(강원대학교 교수) 주동범(부경대학교 교수)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책임연구원 : 문성호(중앙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임영식(중앙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문호영(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김남정(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한지연(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 개발	책임연구원 : 박영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공동연구원 :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수) 김성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 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책임연구원 : 이민희(평택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강병로(카톨릭대학교 박사과정)
09-R16-4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책임연구원 : 최순중(경기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수) 조남익(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

연구 요약

1.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이라는 측면과 능동적 복지정책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방향과 주요내용을 제안하는 것임.
- 둘째, 다양한 계층의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수립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 연구주제 및 추진체계

-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역량개발의 주체인 동시에 능동적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계층을 전체 일반 아동·청소년계층, 취약 아동·청소년계층, 위기 아동·청소년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별로 적합한 연구주제를 설정함.
- 전체 일반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능동적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계층별 세부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총괄적 연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수행함.
- 다양한 유형의 취약·위기청소년계층 중에서 최근 사회적 변화나 능동적 복지정책의 주요하고 시급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4개의 계층을 선정하고, 이들 계층별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량부분이나 정책분야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전문연구진이 별도로 수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취약 아동·청소년계층 중에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전문연구진이 수행함.

- 둘째, 위기아동·청소년계층 중에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탈학교청소년)의 역량개발,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역량과 관련된 주제를 세부적인 연구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진이 수행함.
- 세부적인 연구주제와 추진체계는 <표 1>과 같음.

<표 1> 세부 연구주제와 추진체계

대상	연구주제	주요내용과 연구기관
일반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종합연구 및 총괄	-전체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향 및 내용 -전체 연구결과 요약 정리 -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돌봄사업 개선방안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분석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후아카데미 등 주요사업의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책 도출 -연구기관 : 중앙대학교(문성호 외)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실태와 정책분석 및 능동적 복지정책 방안	-장애아동·청소년의 현황, 관련정책 현황 분석 -장애아동·청소년·청소년의 역량개발 관련 외국 정책 및 사업 분석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방향설정 및 정책 제안 -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위기계층 아동·청소년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대안교육 실태와 역량개발 프로그램 개발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현황 및 역량개발 관련 프로그램 현황 분석 -연구기관 : 평택대학교(이민희 외)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역량 개발 : 자립지원 역량개발 방안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개발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 고찰 -자립지원 시설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범죄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사업 제안 -연구기관 : 경기대학교(최순중 외)

3. 연구의 내용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의 개념과 영역, 세부적인 지표와 관련된 기존연구 검토를 토대로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 등을 설정하고, 역량을 구성하는 각 영역별로 능동적 복지정책 수립의 방향과 전략, 주요 내용을 제안함.
-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 ‘아동·청소년 돌봄사업’이라고 일컫고,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 활동, 보육, 보건,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 정의함. 각 사업들에 대해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현황, 중점사업에 대해 분석함.
- 장애아동·청소년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을 제안함.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청소년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여 자존감과 직업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정비의 방향, 시설, 프로그램, 지도인력, 전달체계, 제도권 교육과의 연계체제 등을 제안함.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과 시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자립지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함.

4. 연구의 결과

-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에 대한 분석과 능동적 복지 정책이라는 개념의 관계를 “역량개발을 위한 또는 역량개발에 의한 능동적 복지정책”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특히 최근 논의되는 ‘강점관점’의 복지적 접근과 ‘역량개발’이라는 측면이 상호간에 중첩 또는 보완된다는 점을 제안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자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행복한 청소년 육성”으로 설정하였음. 이 정책비전은 청소년의 자신만을 위한 역량개발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능력 제공을 통한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 이러한 정책비전을 위한 전략으로 청소년 역량 영역별, 청소년계층별로 맞춤형 정책 수립 등 3가지의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후 역량 영역별 정책의 목표와 접근법 등을 제안하였으며, 결론부분에서 관련 정책이 해결해야할 주요과제를 제시하였음.
-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관련 정책 중 돌봄사업과 관련된 3가지 사업별 전달체계, 대상, 서비스프로그램, 재정 등 비교항목별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이나 재정적 지원, 교육권 확보방안 등을 제안하였음.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대안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인식과 의지,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교사의 양적 및 질적 확보,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단체의 참여와 지원,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진학 가능한 학력인정, 직업역량개발 전문가 인력풀(pool),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 센터 개설 및 운영,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

발,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유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행,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실행, 부모교육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음.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세부 연구주제와 수행체계	5
3. 연구의 내용	8
1)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추진방안연구 : 총괄보고서	8
2)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8
4. 연구의 방법	10
1)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추진방안연구 : 총괄보고서	10
2)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11

II.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1.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15
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개념과 구성	15
2) 능동적 복지정책 개념과 아동·청소년	22
2.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	29
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의 관계 설정	29
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32
3) 아동·청소년 역량영역별 능동적 복지정책 개요	34
3. 아동·청소년의 역량 영역별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35
1)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35
2) 자율적 행동 역량 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44
3) 지적 도구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61

III.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1.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77
 - 1)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77
 - 2)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현황 78
 - 3) 국외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사례 80
 - 4) 아동·청소년 돌봄사업에 관한 정책분석 83
 - 5)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개선방안 93
2.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101
 - 1)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101
 - 2) 장애아동·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102
 - 3) 장애아동·청소년 역량개발 관련 외국 사례 110
 - 4) 장애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 113
3.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 추진방안 118
 - 1)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118
 - 2)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현황 조사 분석 ... 122
 - 3) 외국의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량개발 사례 124
 - 4)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의 방향과 전략 127
4. 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 방안 132
 - 1) 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과 능동적 복지정책 132
 - 2)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관별 프로그램 분석 134
 - 3) 범죄청소년의 요구 조사 151
 - 4)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방안 157

IV.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163
2. 결론 및 정책 제언 168

참 고 문 헌 175

표 목차

<표 I-1> 세부 연구주제와 주요내용	6
<표 II-1> 청소년의 핵심역량의 각 영역별 하위요소와 지표	21
<표 II-2> 강점관점의 기본원리와 실천원칙	31
<표 II-3>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의 관계	32
<표 II-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	33
<표 II-5>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영역과 능동적 복지정책	34
<표 II-6>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범주 및 구성요소	36
<표 II-7>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아동·청소년 정책	37
<표 II-8>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세부방안	42
<표 II-9> 자율적 행동 역량의 하위요소 및 행동준거	48
<표 II-10> 2008년 청소년자원봉사 참여율	52
<표 II-1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현황(개소)	55
<표 II-12> 도구적 상호작용 생애핵심역량 구성	61
<표 II-13> 지적 도구 활용 관련 청소년 생애 핵심 역량 지표	62
<표 II-14> 지적 도구 활용 역량관련 정책현황 분석 대상 사업	63
<표 II-15>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과 지적 도구 활용 역량 개발	65
<표 II-16>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과 지적 도구 활용 역량 개발	66
<표 II-17> 청소년공부방 사업과 지적 도구 활용 역량 개발	67
<표 II-18> 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 정책 결정시 고려할 우선 순위	72

<표 III-1> 소년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137
<표 III-2> 대안교육센터 프로그램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139
<표 III-3> 소년보호협회산하 자립생활관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141
<표 III-4> 보호관찰소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145
<표 III-5> 법무보호복지공단산하 자립생활관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148
<표 III-6> 소년교도소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150
<표 IV-1>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	164
<표 IV-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영역과 능동적 복지정책	165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7
[그림 II-1] 한국형 청소년기 핵심역량 영역체계(안)	20
[그림 II-2] 초기 능동적 복지정책 체계도	24
[그림 II-3]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방향	40
[그림 II-4] 인지적 영역의 위계적 행동 분류	69
[그림 II-5] 신교육목표분류학의 이차원 모형	69
[그림 II-6] Marzano의 신교육목표분류학에 따른 인간 행동 모형	70
[그림 II-7] 인지체제들 간의 관계	71
[그림 III-1]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 모형	131
[그림 III-2] 비행청소년의 자립역량 개발과 능동적 복지의 관계	133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세부 연구주제와 수행체계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방법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취업의 불확실성, 사회적 소수자 부상, 가족구조의 다양화 등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의 구조와 기능은 사회구성원에게 새로운 형태의 능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 복지정책에서의 변화 또한 요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기존의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학습능력 습득과 더불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와 갈등 해결 능력과 같은 ‘역량(competency)’이나 자질의 습득을 필요로 한다. OECD가 1997년부터 추진해온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의 경우, 현대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을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하위 차원으로 총 9가지의 역량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부터 청소년의 생애핵심역량 개발과 관련된 심층적 연구(김기현 외, 2008)가 진행되고 있음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최근 선진국은 아동과 청소년 개인의 역량에 대한 강조의 차원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일정수준의 국가차원의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역량 기반 학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는 역량에 기초한 자격체계(competency-based qualifica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그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그 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증하고 이를 고용과 연결시키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유현숙 외, 2002).

2008년 2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시한 5대 국정지표 중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관계가 깊은 것은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교육제도권 밖에서의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가

진 지표는 ‘능동적 복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능동적 복지’라는 현 정부의 복지철학은 과거 정부의 ‘생산적 복지’나 ‘참여복지’와 마찬가지로 그 개념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차원의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역량개발 정책과 관련된 능동적 복지정책의 연결점을 찾기 힘든 상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존 논의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생애주기적인 차원에서 역량개발이라는 과제는 일반 청소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 농어촌, 다문화아동·청소년 등)과 위기계층(학교 중도탈락, 비행, 범죄 청소년 등)에 속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도 기회의 균등보장이나 자립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개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소외계층 대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역량개발 과제는 출발기회의 균등이라는 시각에서도 시급히 연구되어야 하고 정부차원의 능동적 복지정책에 입각한 접근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이라는 측면과 능동적 복지정책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의 수립방향과 주요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의 개념과 영역, 세부적인 지표와 관련된 기존연구 검토를 토대로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 등을 설정하고, 역량을 구성하는 각 영역별로 능동적 복지정책 수립의 방향과 전략,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취약 또는 위기계층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수립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능

동적 복지라는 개념은 실업, 빈곤, 질병 등 기존의 사회적 위험뿐만 아니라 능력부족, 낮은 소득의 일자리, 한부모가족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확대된 개념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취약 아동·청소년계층 중에서 저소득층 가정, 장애아동·청소년계층, 위기 아동·청소년계층 중에는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계층과 범죄 청소년의 자립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들 계층별로 시급하게 필요한 역량분야나 이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분야를 파악하고, 역량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들의 특성에 맞는 능동적 복지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세부 연구주제와 수행체계

이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주제와 주요내용은 <표 I-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먼저 역량개발의 주체인 동시에 능동적 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계층을 일반 아동·청소년계층, 취약 아동·청소년계층, 위기 아동·청소년계층으로 구분하였고, 각 계층별로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전체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능동적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계층별로 세부적인 연구주제별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총괄적 연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수행하였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취약·위기청소년계층 중에서 최근의 사회적 변화나 능동적 복지정책의 주요하고 시급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4개의 계층을 선정하고 이들 계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량부분이나 복지정책분야 중 중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주제를 선정한 후 전문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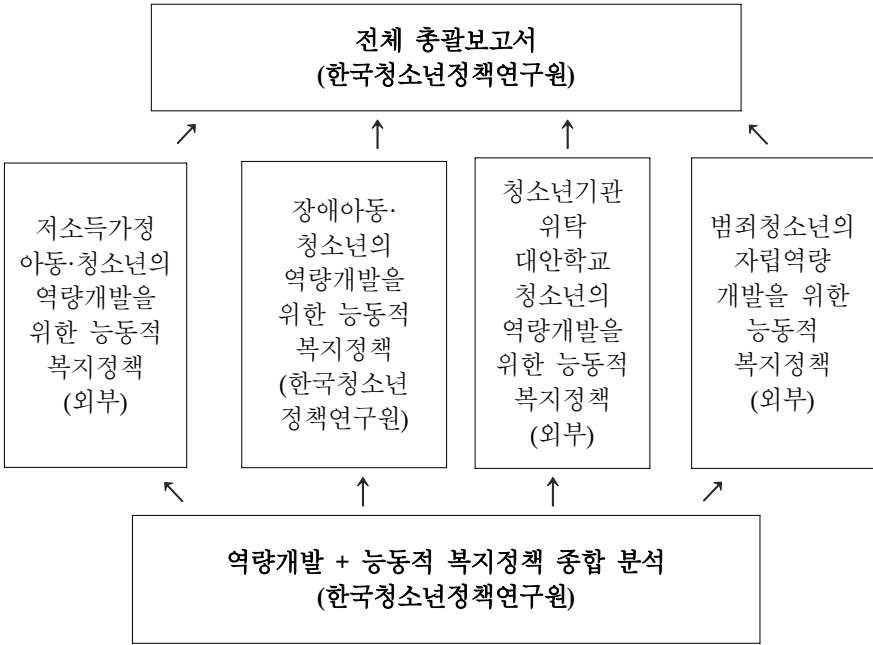
취약 아동·청소년계층 중에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과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방안 연

구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위기아동·청소년계층과 관련해서는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탈학교청소년)의 역량개발이라는 주제와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역량과 관련된 주제를 세부적인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표 I -1〉 세부 연구주제와 주요내용

대상	연구주제	주요내용과 연구진
일반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종합연구 및 총괄	-전체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 책 추진방향 및 내용 -전체 연구결과 요약 정리 -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저소득가정 아동·청 소년의 역량개발 : 돌봄사업 개선방안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복 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분석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후아카데미 등 주요사업의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책 도출 -연구기관 : 중앙대학교(문성호 외)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장애아동 실태와 정 책분석 및 능동적 복 지정책 방안	-장애아동·청소년의 현황, 관련정책 현황 분석 -장애아동·청소년·청소년의 역량개발 관련 외국 정책 및 사업 분석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 지정책 방향설정 및 정책 제안 -연구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진
위기계층 아동·청소년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 학교 청소년(탈학교청 소년)의 역량개발 : 대안교육 실태와 역 량개발 프로그램 개 발	-대안교육과 청소년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현황 및 역량개발 관련 프로그램 현황 분석 -연구기관 : 평택대학교(이민희 외)
	범죄청소년의 자립지 원 역량 : 자립지원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 책 개발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 고찰 -자립지원시설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 지정책의 방향과 사업 제안 -연구기관 : 경기대학교(최순중 외)

이러한 연구주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제별로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별도의 보고서와 동시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을 담는 총괄보고서를 발간하는 연구수행체계를 갖추었다[그림 I-1].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3. 연구의 내용

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이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주요과제의 현황과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요 계층별 역량개발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세부적인 전략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 역량 영역별 주요 정책현황 분석 및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2)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1)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 ‘아동·청소년 돌봄사업’이라 일컫고,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 활동, 보육, 보건,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들에 대해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현황, 중점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사례와 현황을 분석한 후 사업들의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의 성과 및 한계 그리고 시사점 도출은 연구자 분석과 더불어 포커스집단 인터뷰,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하였다. 분석은 크게 전달체계, 대상, 급여, 재정 측면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2)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이 연구는 장애아동·청소년 실태 분석, 정책현황과 문제점, 주요 외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역량개발 관련 사례 조사, 역량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세부 정책과제의 영역과 범위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안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대안교육정책이 청소년정책과의 강한 연계성이 있음을 밝혀내고 그 의미와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년원 등과 같은 대표적인 청소년기관에서 전일제 또는 단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과정 및 프로그램, 지도인력 등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셋째, 외국 사례로는 독일과 영국의 청소년관련 시설과 기관들에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직업역량 개발의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4) 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 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이 연구에서는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범죄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정책과 관련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범죄청소년을 위한 기관과 시설운영 및 시설환경 실태 분석과 각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경제자립 프로그램,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영역별로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장전문가 조사(델파이기법)를 통해 범죄청소년

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개발 방향, 자립지원 시설의 문제점, 자립지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하여 수혜자의 시각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다.

4. 연구의 방법

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1) 문헌연구

총괄보고서와 역량과 능동적 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최근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량개발 관련 연구 및 능동적 복지정책 연구결과나 각종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검토, 능동적 복지와 아동·청소년의 역량 개발과의 관계성 검토와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였다.

(2) 면접조사연구

현행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정책 중 역량개발과 관련된 능동적 복지정책 현황 조사나 개선되어야 할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위한 면접 등을 진행하였다.

(4) 전문가 자문 및 정책협의회 개최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관련된 아동·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자문 및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였다

(5) 워크숍 개최

연구수행체계의 특성상 특정 계층별 연구진과의 협동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체 연구의 체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2)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1)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국내사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 아동센터, 드림스타트)와 외국(미국, 일본, 영국)의 사례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전문가 자문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사업의 개선 방향과 대안 제시를 위해 사업 실무자를 중심으로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돌봄사업의 개선방안과 정책 결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2)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이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탐색, 주요 외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현행 우리나라 장애아동·청소년 역량개발 및 복지관련 정책과 세부사업에 대한 정책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관련 정부 부처와의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였다.

(3)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이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과 외국의 대안교육정책 사례와 현황 분석, 대안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연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현행 한국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현황 실태조사,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교사 및 청소년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역량강화 대책에 대한 전문가 포럼과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교사 및 정책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4) 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 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이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범죄청소년의 법적, 경제적, 사회·제도적 측면의 개념과 시스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료 및 법령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전국의 관련시설인 소년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의 자립생활관과 소년보호협회시설 등을 대상으로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관련된 조사지를 이메일(E-mail)을 통해 배포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했다. 둘째,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알아보기 위해 소년원 수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설과 기관의 현황,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발방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설기관별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응답자들의 전문적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통해 사용했다.

Ⅱ.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1.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2.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
3. 아동·청소년의 역량 영역별 능동적 복지정책

II.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1.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개념과 구성

(1) 역량 개념과 특징

‘역량(competency)’¹⁾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서구를 중심으로 경영학적 측면에서 직무에 대한 평가도구로써 등장한 개념이다. 1973년 하버드대학의 맥클랜드(McClelland) 교수는 지식을 위주로 측정하는 전통적인 지능검사가 업무성이나 인생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조직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알고 있는 전문 지식보다는 직무의 핵심적 성공요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직무수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클렘프(Klemp, 1980) 또한 역량 개념을 “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탁월한 수행자의 기본적 특성에는 개인의 동기, 성격, 지식, 기술, 능력, 태도, 자기 이미지나 사회적 역할 등이 포함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유태용, 2007 재 인용). 보야치스(Boyatzis, 1982)는 역량을 “어떤 개인이 특정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역량개념은 한 개인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성과와

1) 역량에 관한 문헌들에서 초기에는 역량을 나타내는 단어로 Competence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Competency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세이다. 또한 역량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량을 나타내는 용어로 핵심 역량(Core Competency)도 자주 언급된다.

관련되며, 성과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경영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역량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역량은 관찰 가능한 행동 또는 활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 특성이다. 역량은 행동으로 관찰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역량은 기술, 지식, 행동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치관, 사고 스타일, 성격, 동기, 태도 등도 포함한다.

둘째, 역량은 조직 내에서 개인들간 성과의 차이를 유발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따라서 역량은 구성원들이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이나 평범한 수행자와는 구별되는 고도 수행자가 지니고 있는 행동특성이다. 역량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지식, 능력과 행동특성으로 개인의 행동과 성과를 통해 밖으로 표출된다.

셋째, 역량은 조직 내에서 특정한 목표나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다. 역량은 일반적인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일상적 능력을 의미하기보다는 특정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특정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특정한 상황’이란 특정한 개인 또는 조직이 처해 있는 고유한 상황을 말하며, ‘특정한 목표’는 개인의 행동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달성 지점을 나타낸다. ‘효과적’이란 목표달성을 위해 동원된 자원의 양과 질, 그리고 활용방법이 타당하고 생산적임을 뜻한다.

넷째, 개인의 역량은 조직 내에서 교육훈련 및 개발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에 근거해 국내에서도 최근에 개인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스펜서와 스펜서(Spencer & Spencer, 1993)는 역량을 구성하는 5가지 특성으로 동기(motives), 특질(traits), 자아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동기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며, 특질은 신체적 특성과 더불어 상황이나 정보에 대한 일관된 반응을 말한다. 자아개념은 개인의 태도, 가치 혹은 자아상을 말하며, 지식

은 특정 내용 영역에 있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특정한 물리적·정신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역량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지식과 기술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역량에 비해 표면적인 측면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자아개념, 특질, 동기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층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은 표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하며, 훈련(training)이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동기나 특질은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격의 심층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발하거나 평가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즉 지식과 기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개발, 육성이 가능하지만 동기와 특질은 인간 내면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직업사회에서 역량에 대한 관심은 유능한 인력의 충원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결국 역량이란 특정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된 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직업사회에서 주목한 역량 개념은 개인의 자아개념, 특질, 동기 등과 같은 비인지적 요소가 지식이나 기술 못지않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시켜 주었다. 요컨대 직업사회에서 역량에 대한 관심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역량의 비인지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소경희, 2007a 재인용).

이러한 특징을 종합해 보면 역량이라는 개념은 “개인과 조직의 성공적인 성과달성에 핵심이 되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며, 교육과 지도를 통해 개발이 가능한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영역

주로 조직적 차원이나 경영학적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초기의 역량에 대한 논의는 점차 일상적 삶이나 특정 생활분야에 적용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부터 OECD에서 추진한 DeSeCo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교육학 분야에서 역량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학이나 노동경제학을 중심으로 역량 개념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토대로 이를 국가차원의 정책화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교육학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들은 인적 자원 능력표준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표준에 맞는 학습목표를 재설정하고 국가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유현숙 외 2002, 김안나 외 2003, 유현숙 외 2004). 이 연구들에서는 생애능력의 범주로 기초문해력, 핵심능력, 시민의식, 직업특수능력을 설정하고, 핵심능력 중 3개 능력요소(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와 시민의식 측정을 통해 단계별 생애능력 및 시민의식을 비교하는 동시에 생애능력과 시민의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학교라는 교육제도의 틀을 넘어선 일반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기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역량’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로 청소년의 ‘개발’ 또는 ‘발달’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었다(김현철 외 2005, 김신영 외 2006, 김신영 외 2007). 이후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였다(윤철경 외 2008), 오해섭 외 2008, 권일남 외 2008 등).

같은 맥락에서 2008년 이후 청소년정책에서도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관련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 중에는 ‘역량개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d).

그리고 역량과 관련된 세부적인 영역으로 ‘글로벌 다문화 역량’, ‘민주시민 역량’, ‘진로 및 자립역량’등을 제시하고,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경험을 통하여 각자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체험활동기회를 제공하고, 활동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의 활동지원기반을 확충하고, 역량개발체제를 체계화하여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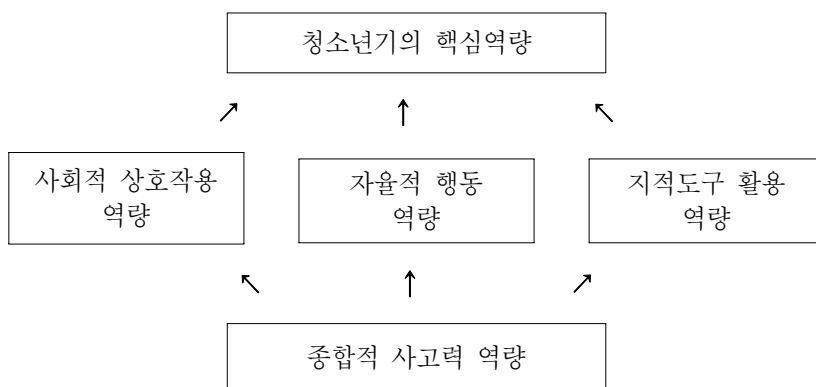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정책의 차원에서 역량이라는 용어는 2009년 5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내에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라는 조직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당시의 아동·청소년의 역량 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의 역량 개발 목표는 “21세기 초일류 국가의 핵심성장동력 육성”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아동·청소년을 미래의 국가 핵심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는 중요 인적자원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가지 핵심 역량으로 ‘학습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 역량’은 학교교육을 통해 배양되어야 하는 역량이며, 사회적 역량은 학교 밖 활동을 통해 배양되어야 하는 역량이다. 따라서 이들 두 역량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청소년이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통해 배양해야할 가장 중추적인 역량은 ‘사회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적 역량’을 다시 ‘시민 역량’, ‘잠재 역량’, ‘글로벌 역량’으로 나누고 있다. 각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민 역량의 경우 ‘참여의 주체’, ‘권리의 보장’,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잠재 역량’의 경우 ‘방과 후 돌봄’,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소년시설 확충’, ‘지도인력의 전문화’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역량’의 경우 ‘국가

간 정기 교류’,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행사 참여 기회’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6월 이후, 역량개발을 담당하던 과의 명칭이 ‘아동·청소년 활동진흥과’로 변경되면서 점차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반에 있어서 ‘역량’이라는 용어 사용이 그리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로 보여진다. 특히 역량이라는 용어는 과거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크게 확대하고 입체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차원에서 청소년역량이라는 용어를 단독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교육정책적 차원의 역량이라는 개념과의 중복성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과 정책적 측면을 전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김기현 외(2008)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영역체계를 기초로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생애핵심역량을 규명하고 이를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영역체계는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한국형 청소년기 핵심역량 영역체계(안)

자료: 김기현 외(2008)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핵심역량 영역별로 하위요소와 측정지표를 <표 II-1>과 같이 매우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II-1> 청소년의 핵심역량의 각 영역별 하위요소와 지표

역량 영역	하위 요소	측정지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관계지향성	-적극적 경청 -친구, 친척, 이웃과 접촉의 질과 양 -공공에 대한 신뢰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사회적 협력과 협동	-사회적 역할이해 -사회적 유대감 -시민참여
	-갈등관리	-문제인식 -문제해결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다양한 가치의 수용정도
자율적 행동 역량	-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패턴이해 -체계이해 -행동과 결과인지 -행동선택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목표 및 과제설정 -계획수립 -수행 -평가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행동하기	-흥미이해 -규칙과 원리이해 -욕구와 권리주장 -대안제시
지적 도구 활용 역량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	-읽기능력 -쓰기능력 -말하기능력 -듣기능력 -외국어능력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활용	-수리능력 -과학능력
	-기술을 상호적으로 활용	-정보활용능력 -기술활용능력 -기타능력

자료: 김기현 외(2008)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추진방안을 검토하는 이 연구에서는 김기현 외(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의 핵심역량의 영역과 하위요소별 세부적인 특성을 토대로 관련 정책 현황분석과 정부차원의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 능동적 복지정책 개념과 아동·청소년

(1) 능동적 복지정책 개념과 방향

정책적 차원의 ‘능동적 복지정책’이라는 개념은 2008년 2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시한 5대 국정지표에 포함되어 있지만, 범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방향을 의미하는 ‘능동적 복지’의 개념에 대한 통일된 논지를 확인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능동적 복지’라는 국정지표를 주로 시행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3월 발표한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서’에 따르면, ‘능동적 복지’란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복지”를 의미한다. 반면, 같은 해인 2008년 10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능동적 복지의 국정지표를 구성하는 4대 전략과 20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에 발표된 2009년 업무보고자료인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에서는 ‘능동적 복지정책’이라는 단어 자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청소년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 ‘능동적 복지정책’의 개념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능동적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나 추진방향, 세부적인 정책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그 특징과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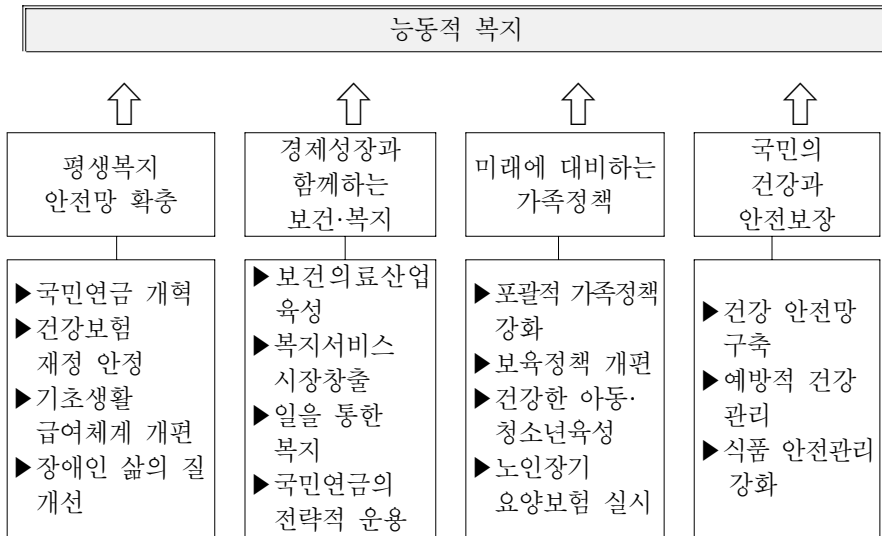
기존의 ‘생산적 복지’나 ‘참여복지’와 개념상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지 않

은 상태에서 제시된 초기의 ‘능동적 복지’개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호한다”는 점에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a).

이러한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첫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생 복지, 둘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통합·맞춤형 복지, 셋째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 넷째, 효율적 전달체계를 통한 국민 체감형 복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향으로, 첫째, 공급자, 중앙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와 현장의 요구를 중심으로 전환, 둘째, 정부주도 방식에서 정부·민간이 함께 협력관계로, 셋째, 물량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정부차원에서 밝히고 있는 능동적 복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복지 수요자를 취약계층 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국민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복지 공급방식을 국가주도에서 사회공동 협력체계로 전환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복지 형평성 제고에 주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복지는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빈곤과 질병의 사후보전 차원에서 한 발 나아가 보육, 건강관련, 노인성 질환 예방 등 사전적·예방적 복지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다. 넷째, 각종 재해나 재난, 그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의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향은 [그림 II-2]의 4대 정책목표와 실천과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초기의 능동적 복지정책 내용은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 점에서는 기존의 복지정책과 특징이 같고, 복지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줄이고 민영화를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복지정책 개념과 다르다.



[그림 II-2] 초기 능동적 복지정책 체계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a)

초기의 능동적 복지개념이나 추진방향은 같은 해인 2008년 10월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00대 국정과제 중 능동적 복지와 관련된 4대 전략으로는 평생복지기반 마련, 맞춤형 복지 실현,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 일을 통한 복지실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히고 있는 전략을 토대로 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복지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개편하는 예방·맞춤·종합형 복지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장기능을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며, 지분형 분양주택 도입 등을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수월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넷째, 고용서비스 강화와 직업능력개발 시스템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이 있다.

이후 2008년 12월 발표한 2009년 업무보고에서 밝히고 있는 보건복지정책의 주요 방향으로는 첫째, 위기계층 증가에 대응한 위기계층 증가에 대응한 ‘철저하고 탄력적인 보호’와 중산층의 추락을 방지할 ‘선제적 대응’, 둘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산업 육성’, 셋째, ‘복지시스템’ 개편과 ‘추가적인 재원 발굴’ 등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능동적 복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처럼 ‘능동적 복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안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2008년부터 급속히 확산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생활의 위축이나 정부의 급박한 대응에 따라 복지정책 자체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명확히 자리잡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다. 다만,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된 연구(김승권 외, 2008b)에서 ‘능동적 복지’의 개념을 보다 정교하고 섬세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승권 외(2008b)에서 정의한 능동적 복지는 “국민의 사회적 위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국민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개인 및 사회의 적극적 협력과 함께 재기 또는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하는 복지”이다. 이는 국가가 중심이 되고 사회와 개인이 적극 참여하는 복지로 해석되는 것으로 책임 있는 국가에 대한 강조와 사회적 합의와 참여, 자기창조와 배려하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능동적 복지가 지닌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능동적 복지는 미래사회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접근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저출산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 교육서비스 양적 및 질적 강화, 청년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이다.

둘째, 능동적 복지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접근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잔여적

측면의 복지뿐만 아니라 ‘보편적 측면’의 복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개인 및 사회의 책임과 의지 및 능력을 중요한 덕목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기존 복지체계의 조직화와 효율화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의 당위성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능동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생애주기별 통합적 복지이다. 이는 영아기부터 유년기까지의 전 생애단계에서의 통합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수요자의 제반 특성 및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예방적 복지로, 고비용의 사후 치료적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저비용의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최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국가의 책임과 가족, 기업, 사회 책임의 균형이다. 공동체적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복지방식에 대한 강조이다.

다섯째,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기회확대이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립 및 자활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복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출발선에서의 공평성을 강조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능력개발을 중시한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여섯째, 보건복지 서비스의 성장동력화로써, 보건복지 관련 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2) 능동적 복지정책과 아동·청소년

2008년 초기에 정부가 제시한 능동적 복지의 기본적인 방침에서는 복지의 수요자를 취약계층 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대부분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구시대의 발전체제는 복지수요자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았는데, 새로운 발전체제는 ‘중산층 이하 대부분 국민’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아홉 가지 전략 중에서 아동·청소년과 직접 관련된 것은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등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면, 2008년 일반회계 16,011,476백만 원 중에서 ‘보육, 가족 및 여성’ 예산이 1,532,827백만 원(9.6%)이고, ‘노인·청소년’ 예산이 2,120,647백만 원(13.2%)이었다. 즉 ‘아동·청소년’ 예산은 다른 분야에 섞여서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아동·청소년 영역은 독립된 영역으로 다루기보다는 가족정책 속에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안하는 “능동적 복지사회의 미래상”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은 13가지 지표 중 2가지로 다루어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a). 그 내용을 보면 ‘드림스타트 지역’을 2008년 32개 시·군·구에서 2012년에 232개 시·군·구로 확대하겠다는 것과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수’를 40만 명(14.6%)에서 80만 명(30.7%)으로 늘리겠다는 것 등이다. 아동·청소년정책을 대표할만한 지표로서 개소당 연간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로 확장해도 7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른 지표와 크게 비교된다(이상주, 2008).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였고, 복지사업과 복지예산과 함께 복지인력을 늘리고, 복지전달체계에서 공적 책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뚜렷한 정책적 비전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량개발과 관련된 세부

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김승권 외(2008b)에서 제시하고 있는 능동적 복지의 기본방향이나 추진전략에 ‘역량강화’ 기회 확대가 포함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는 환영할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능동적 복지의 측면에서 역량강화라는 주제의 핵심적 요소로 양방향 정보(지식)접근성 제고, 사회통합 및 참여,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조직역량 등이 제시된다. 역량강화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의사결정과 자원배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된 사회복지자원이 사회복지대상자의 개별적인 이해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배치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량강화라는 측면에서 시행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책방향으로는 첫째, 빈곤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회적이고 인종적 소외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참여를 장려하고 그들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구축하는 것, 둘째, 정책의 입안 및 전달과정에서 정책대상자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능동적 복지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역량개발과 아동·청소년정책의 맥락에서 바라보는 역량개발과는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정책에서 추구하는 역량개발이 더 광의적 의미를 지닌다. 다만, 정부의 복지철학으로서 제시되는 ‘능동적 복지’의 한 부분으로 역량개발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아동·청소년정책이 지닌 중요성의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

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의 관계 설정

능동적 복지는 기존의 병리적 증상과 결핍, 위험 등에 초점을 두는 문제나 결함에 초점을 둔 관점과는 달리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 적극성, 임파워먼트 등을 강조한다. 기존의 잔여적 복지는 복지 수요자의 문제행동과 병리적 증상, 위험과 결핍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전문가가 이를 진단하고 치료적 개입을 통해 이를 완화하거나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시적이고 임상적인 병리적 결함모델(deficit model)에 의존한 것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적이고 병리적 결함 모델에 대한 비판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그 대안으로 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이 주목을 받고 있다(천정웅·이용교, 2007).

강점관점의 복지는 의료적 모델에서 사용하는 병리적 언어를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강점의 언어 즉, 인간이 가진 강점과 힘, 놀랄만한 능력과 회복력, 재능에 관한 신뢰로 대체한다. 복지에 대한 강점관점의 접근은 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실천영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강점관점은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인 폭력이나 가출, 자살, 혼전임신, 약물, 비행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넘어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능력, 재능과 기술에 대해 탐색하게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열망과 희망, 꿈 등을 발견하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전을 말하게 하고 성취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시각을 일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적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강점관점에서는 문제를 넘어서 변화를 위해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등의 자원을 동원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비전을 말하게 하며, 그들이 이야기하는 생활 속에 숨겨진 능력, 열망, 희망, 꿈을 발견하게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가지는 문제, 결함, 잘못된 것, 실패에 대한 진단과 증상과 같은 병리학적 언어들을 일소하고, 임파워먼트(empowerment),

소속감(membership), 회복력(resilience), 치유(healing), 대화와 협동(dialog and cooperation), 불신의 종식(suspension of disbelief) 등과 같은 강점의 어휘들로 주요 개념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복지정책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즉, 적극적 복지라는 관점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가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문제해결의 적극적인 주체이자 행위자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치료를 받고 치료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길을 모색하고 탐험하는 동반자로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립시키고 있다.

그리고 강점관점의 긍정적 어휘들이 가지는 힘은 기본 원리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이 관점의 기본적인 가정은 모든 사람은 강점을 가지며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회복할 것이며, 다양한 내외적 자원들이 그들에게 유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강점관점에서는 모든 개인은 타고난 강점을 지닌 개별화된 존재이고, 클라이언트 삶에 대한 전문가는 치료자나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바로 클라이언트 자신이며, 외상적 장애, 학대, 질병 등이 해로울 수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도전과 기회의 자원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들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는 어떠한 상한선도 가정할 수 없으며, 사회복지사는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클라이언트의 열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다(Saleebey, 2006; 천정웅·이용교, 2007: 재인용).

이러한 강점관점은 능동적 복지와 아동·청소년의 역량 관계 즉,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에 의한, 그리고 역량을 위한 능동적 복지’가 원만하게 형성되기 위한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능동적 복지를 통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는 기존의 문제중심 접근이나 병리적 결함모델 또는 의료적 모델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특히 역량 개발은 청소년의 활기와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 즉 청소년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 복지’와 ‘역량에 의한 능동적 복지’를 위해서는 강점관점의 기본원리와 실천원리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점관점에서 강조하는 “3P” 즉, 가망성(promise), 가능성(possibility), 긍정적 기대(positive expectations)와 “3C” 즉, 역량(competence), 능력(capacities), 용기(courage), 그리고 “3R” 즉 레질리언스(resilience), 준비성(reserve), 자원(resources) 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천정웅·이용교, 2007: 재인용).

〈표 II-2〉 강점관점의 기본원리와 실천원칙

구분	주요요소
기본 원리	· 모든 개인, 집단, 가족과 지역사회는 강점을 가진다. · 개인이 경험한 충격, 학대, 질병과 고통은 해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될 수 있다. · 개인의 성장과 변화능력에는 상한선을 가정할 수 없으며,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의 열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 사회사업가는 참여자와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하다.
실천 원칙	· 원조관계의 초기 초점은 개인의 진단, 결정, 증상, 약점이 아닌 강점, 관심, 능력, 지식, 경험, 재능이다. · 원조관계는 위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상호존중하며 협동하는 것이다. · 개개인은 자신의 회복에 책임이 있으며, 참여자가 원조 노력의 주체이며, 사회사업가는 지역사회의 전문가 역할을 수행한다. · 모든 인간은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 강점관점은 지역사회내 자연발생적인 환경에서의 원조활동을 촉진한다. · 지역사회는 잠재적 자원의 오아시스이며, 자연발생적 자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출처: 천정웅·이용교(2007)

2)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또는 역량개발에 의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의 관계를 표로 제시하면 <표 II-3>과 같다. 즉,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개발의 영역과 능동적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공통적 측면에서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표 II-3>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의 관계

구 분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측면
능동적 복지정책 측면	정책비전과 목표	능동적 복지정책 목표 ∩ 역량개발 목표
	추진방향 및 전략	능동적 복지정책 방향과 전략 ∩ 역량의 영역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정책적 비전과 방향은 결국 능동적 복지정책의 목표나 비전,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의 목표나 비전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 설정될 수 있다.

앞서 검토한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의 의미와 정책 현황, 능동적 복지의 방향 등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관련 비전과 목표를 ‘자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행복한 청소년 육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 비전은 청소년의 자신만을 위한 역량개발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능력 제공을 통한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표 II-4>.

이러한 정책비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도 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과 역량개발의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청소년 역량 영역별로 그리고 청소년계층별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역량을 구성하는 3가지 영역별로 특성화된 전략과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과

동시에 다양한 청소년계층별로 상대적으로 중요시되는 역량영역별 정책이 맞춤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저소득계층의 경우, 특정 역량보다는 이러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서비스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고, 범죄청소년의 경우는 자립과 관련된 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표 II-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정책비전과 목표	“자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행복한 청소년 육성” ↑
(배경)	능동적 복지정책 목표 -기본생활 보장 -자립기회 제공 -행복한 삶 역량개발 목표 - 개인의 성공적인 삶 기반 제공 - 사회 기여 능력 배양 - 종합적 능력 배양
추진방향 및 전략	1. 청소년 역량 영역별, 청소년 계층별 맞춤형 정책 2. 청소년과 국가, 사회가 함께 하는 정책 3. 청소년 자립을 위한 관련 정책의 통합전달체계 확립 ↑
(배경)	능동적 복지의 방향 -생애주기 통합복지 -수요자 맞춤형복지 -예방적 복지 -균형있는 책임복지 -기회확대 역량개발의 영역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자율적 행동 영역 - 지적도구 활용영역 ↑
	(능동적 복지의 전략) -통합전달체계 형성 -개별화된 전문서비스 -자립지원 -민간의 복지참여

둘째, 청소년과 국가, 사회가 함께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족이나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정책적 대상인 청소년 스스로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추진전략과 방향으로 청소년 자립을 위한 관련정책의 통합전달체계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맞춤형 복지제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 아동·청소년 역량영역별 능동적 복지정책 개요

앞서 검토한 담론 수준의 능동적 복지정책에 대한 검토와 역량 영역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할 때, 역량개발 영역별 관련복지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영역과 능동적 복지정책

구 분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지적 도구 활용
능동적 복지정책 측면	정책 목표	참여하고 배려하는 능동적 아동·청소년 육성	이성에 기초한 자율적 의사결정과 자유의지에 의한 실행력을 갖춘 아동·청소년 육성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추진 방향 및 전략	- 영역별 관련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에 기초한 정책 추진 -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의 추진 - 예방과 균형원칙에 따른 정책 추진		
	주요 과제	-관계성 강화 -사회적 협력, 협동 력 강화 -갈등관리 능력 증진	-거시적 맥락에서의 행동 -생애목표 및 과제 수립과 실천 -권리, 이익에 대한 이해와 요구	-언어와 문자 활용 -지식과 정보의 사 회적 활용 -기술의 사회적 활 용

3. 아동·청소년의 역량 영역별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1)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1)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개념과 내용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다문화되고 복잡하게 발전해감에 따라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원활하게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유지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며, 학교에서는 교우들, 교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며,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직장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고, 현대는 그야말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성인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해나가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김기현 외(2008)에서 청소년기의 핵심역량 중 하나로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시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OECD에서 제시하는 ‘이질적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역량 중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범주와 구성요소는 <표 II-6>과 같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하위요소인 관계지향성 범주는 타인과의 관계 유지능력으로 아동·청소년이 가족구성원, 친구, 이웃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며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상호 호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생애, 가치관, 신념, 문화 등을 존중하고 감화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협력, 협동 범주는 다른 이들과 협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범주는 갈등을 일으키는 이해관계를 협상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하여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표 II-6〉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범주 및 구성요소

역량	역량 범주	구 성 요 소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 지향성	•적극적 경청 •도움(희생) •친구·친척·이웃과 접촉의 질과 양 •사회적 네트워크-신뢰형성-공공에 대한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신뢰형성-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사회적 협력, 협동	•사회적 역할 이해·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유대감 •시민참여-영향력 •시민참여-지역사회 참여 •시민참여-봉사
	갈등 관리	•문제인식 •문제해결 •가치 및 다양성-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인식 •가치 및 다양성-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가치 및 다양성-다양한 가치의 수용 정도

(2)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현황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정책 목표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관련된 내용은 ‘사회적 역량’의 ‘시민 역량’, ‘잠재 역량’, ‘글로벌 역량’ 모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전략 가운데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관련된 것은 시민 역량의 ‘참여의 주체’와 ‘자원봉사 활성화’, 잠재 역량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역량의 ‘국가 간 정기 교류’, ‘해외체험 프로그램’, ‘국제행사 참여 기회’라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정책 내용과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연관하여 실제적으로 살펴

보면 <표 II-7>과 같다.

<표 II-7>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과 아동·청소년 정책

역량	역량 범주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지향성	•국가 간 정기 교류 •국제행사 참여 기회
	사회적 협력, 협동	•참여의 주체 •자원봉사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갈등관리	•해외체험 프로그램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가 간 정기교류와 국제행사 참여 기회 등과 같은 정책은 관계지향 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참여의 주체, 자원봉사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책은 사회적 협력, 협동 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정책은 갈등관리 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이다. 대표적으로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건립 추진(2010년 7월 개원 예정), 국립(영덕·김제)청소년수련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보급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 지속 확대를 위해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동아리, 활동 공모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 체계 보강

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종합정보서비스망(all4youth.net) 확충 및 개편을 통해 아동·청소년 시설·단체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활동프로그램 정보제공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국가 간 청소년교류 확대사업으로, 교류협정 체결국을 주요 선진국, 자원보유국, 신흥강국 등으로 확대하고, 교류약정 체결 국가 간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 사업이다. 주요국가의 세계 선도적 강점 분야에 대한 테마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창안한 주제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아시아 청소년 초청 연구, 국제청소년광장 등 국제청소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 해외봉사활동사업이다. 개발도상국가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강화하고 타문화체험이나 교류활동 등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목표는 매우 미래 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변화의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정책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의 추진이 주로 인프라 구축, 특히 수련시설 확충 등에 치중하고 있었으며, 국제교류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에 더욱 많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강화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이에 못지않게 관련된 지식의 함양도 중요하다. 관련 지식의 바탕 위에 기술 습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역량이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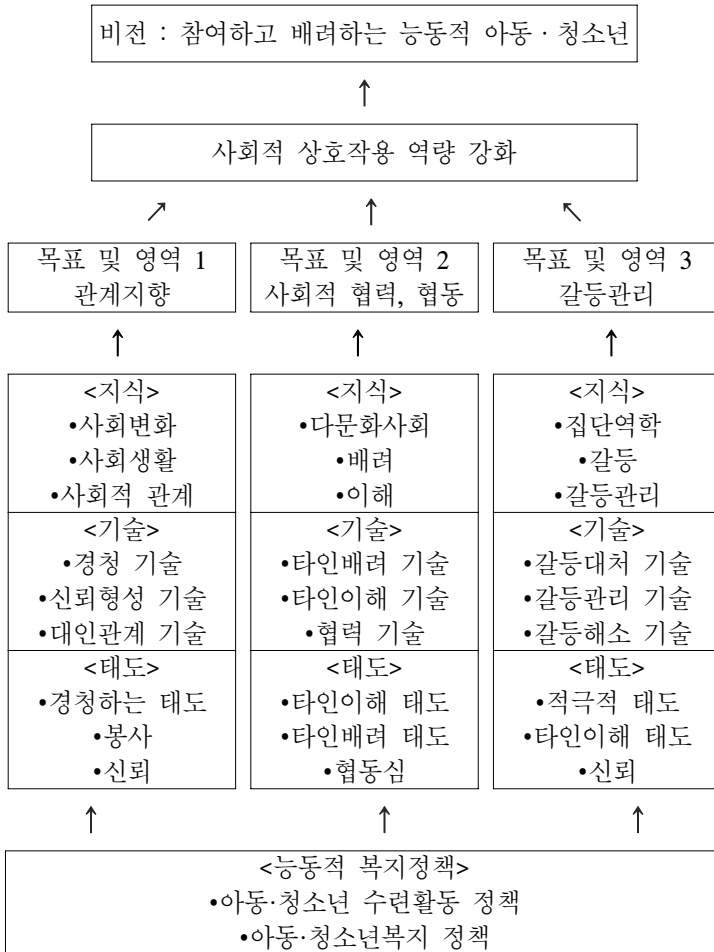
게 발휘되고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태도 함양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량 강화는 지식→기술→태도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아동·청소년들에게 길러주기 위해 ‘능동적 복지’정책은 무엇을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능동적 복지정책이 지향하는 비전, 목표,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능동적 복지정책의 비전을 먼저 개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개발하고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구현 방안은 [그림 II-3]과 같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참여하고 배려하는 능동적 아동·청소년”으로 설정하였다.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 더 이질적인 사회구성원들과 생활해야 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타인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 적극 참여할 줄 아는 사회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다문화사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은 미래 사회에 적합한 성인으로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 등을 통하여 이러한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역량이 지향하는 비전으로 ‘참여하고 배려하는 능동적 아동·청소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1-3]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방향

다음으로 “참여하고 배려하는 능동적 아동·청소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관계지향’, ‘사회적 협력, 협동’, ‘갈등관리’를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갖춘 미래의 아동·청소년을 관계지향적인 아동·청소년, 사회적 협력, 협동하는 아동·청소년, 갈등을 잘 관리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보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3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지식

(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식 전략이란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하는 지적인 내용을 의미한다. 기술 전략이란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하여 터득해야 하는 기능이나 기술 등을 말한다. 그리고 태도 전략이란 지식과 기술 전략을 통해 배우고 터득한 것을 기초로 아동·청소년이 체화시키는 정서적인 함양이라 할 수 있다.

각 목표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관계지향 목표의 경우 지식 전략으로 사회변화, 사회생활,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내용들을 들 수 있으며, 주로 미래 사회의 변화 모습, 생활 모습, 가치, 사회적 관계의 의미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술 전략으로는 경청 기술, 신뢰형성 기술, 대인관계 기술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전략이다. 태도 전략으로는 경청하는 태도, 봉사 태도, 신뢰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협력, 협동 목표의 경우 지식 전략으로 다문화사회의 의미 및 모습, 배려의 의미 및 내용, 이해의 의미 및 내용 등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 협력 및 협동의 의미 및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술 전략으로는 타인배려 기술, 타인이해 기술, 협력 기술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전략이다. 태도 전략으로는 타인이해 태도, 타인배려 태도, 협동심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목표의 경우 지식 전략으로 집단역학, 갈등의 의미 및 내용, 갈등관리 이론 등을 들 수 있으며, 주로 집단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의미 및 중요성, 갈등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술 전략으로는 갈등대처 기술, 갈등관리 기술, 갈등해소 기술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전략이다. 태도 전략으로는 적극적 태도, 타인이해 태도,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전, 목표, 전략은 아동·청소년 수련활동 정책이나 아동·청소년복지 정책 등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이나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포함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II-8>과 같다.

<표 II-8>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세부방안

비 전	목표	전략	방안
참 여 하 고 배 려 하 는 능 동 적 아 동 · 청 소 년	관계 지향	지식	•사회변화, 사회생활, 사회적 관계 등의 학습 •미래 사회의 변화모습, 생활모습, 가치, 사회적 관계의 의미 및 중요성 교육의 강화
		기술	•경청 기술, 신뢰형성 기술, 대인관계 기술 등의 강화
		태도	•경청하는 태도, 봉사태도, 신뢰태도 등의 강화
	사회적 협력, 협동	지식	•다문화사회의 의미 및 모습, 배려의 의미 및 내 용, 이해의 의미 및 내용 등의 학습 •사회적 협력 및 협동의 의미 및 중요성 교육의 강화
		기술	•타인배려 기술, 타인이해 기술, 협력 기술 등의 강화
		태도	•타인이해 태도, 타인배려 태도, 협동심 등의 강 화
	갈등 관리	지식	•집단역학, 갈등의 의미 및 내용, 갈등관리 이론 등의 학습 •갈등의 의미 및 중요성, 갈등관리 등에 대한 교 육 강화
		기술	•갈등대처 기술, 갈등관리 기술, 갈등해소 기술 등의 강화
		태도	•적극적 태도, 타인이해 태도, 신뢰 등의 강화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
향으로 비전, 목표, 전략,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적 차원의 정책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의 성격 상 아동·청소
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과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경청 기술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타인이해 프로그

램, 협력기술 프로그램, 갈등관리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어울림’ 정책의 강화이다. 여기서 ‘어울림’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관계성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다문화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의 아동·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하기 위해서는 관계, 신뢰, 협력, 갈등해결 등과 같은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 가정, 위기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정책의 강화이다. 저소득 가정, 위기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이 취약하다. 이들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역량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이들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위한 특화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배려’ 정책의 강화이다. 가출, 범죄 등에 노출된 위기 아동·청소년들은 일반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특히 갈등이 심한 경향이 있다. 가정으로부터의 가출, 범죄 등과 같은 문제행동은 필히 갈등을 동반한다. 그리고 이들 아동·청소년은 갈등에 대처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갈등관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류 및 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화이다. 국제화, 세계화의 가속화에 발맞춰 아동·청소년들은 국제적 안목을 기르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사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국제적 경험 및 봉사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강화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국내외 교류 및 봉사 프로그램의 영역을 일상생활 봉사, 농산어촌 교류, 노인 봉사, 장애인 봉사 등과 같은 영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화시킬 필

요가 있다.

여섯째, 학교 밖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존, 드림스타트, 방과후아카데미 등과 같은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및 운영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은 학교 교육을 보완해주고 학교 밖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기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단기간 운영되고 없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자율적 행동 역량 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1) 자율적 행동 역량 개념과 내용

자율적 행동역량이란 자율적 행동과 역량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자율적 행동 역량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행동과 역량의 개념에 대한 고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자율(autonomy)이란 문자 그대로 자기규제(self-rule), 자기통제(self-government)를 의미한다. Dearden(1976)에 따르면 자율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즉,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시민들이 정복자나 최고권력자의 통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규율에 따라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autonomia*라는 용어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이후 자율의 개념은 자치도시국가(self-governing city-state)의 특성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특성이나 성향을 설명하는 용어로도 사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자율적인 사람(autonomous person)이란 “자신의 행위나 삶의 방식에 대한 결정권이 타인이나 외부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율의 개념을 학습상황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인본주의(humanism) 학습이론가들로서 인간

은 성장과 발달에 대한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개인적 자유와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인본주의 학습이론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며,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반면, 교육자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해주는 촉진자(facilitator), 조력자(assistant)로서의 역할을 갖게 된다²⁾.

학습상황에서의 자율은 크게 자기 결정성(self-determination)과 자기 경영성(self-management)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전자는 선택(choice)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상황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학습자가 스스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후자는 통제(control)와 관련된 것으로 학습의 진행방법 및 절차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통제(control)하는 것 즉,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상황에서 자율의 개념 속에는 선택과 통제의 의미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율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는 외적 구속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일관된 생각과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투철한 개인적 가치관과 신념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Partridge(1979)는 자율성의 전제조건으로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 합리적 사고능력(rational reflection), 의지력(strength of will)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즉, 선택의 과정에서 신체적·심리적 구속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자신이 결정

2) 예컨대, 로저스(Rogers, 1983)는 학습이란 전적으로 학습자에 의해서 통제되는 내적 과정이며, 학습자는 자신이 지각한 대로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의미있는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상황에서의 위협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요컨대, 학습자는 성장·발전을 위한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의 자아를 위협하는 요소가 최소한으로 존재하고 자아가 위협받지 않고 있다는 지각을 촉진하는 교육적 상황이 조성될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으로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습에 대한 인본주의적 관점은 학습자의 개인적 참여와 내재적 동기, 자기주도성, 학습자에 의한 평가 등을 강조하는 학습자중심 학습(learner-centered learning),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Candy(1991)는 이상의 세 가지 전제조건을 확대하여, 자율적인 학습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신의 학습목적과 학습계획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사고능력(capacity for rational reflection)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넷째, 자신이 선택한 행위를 두려움 없이 의연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좌절, 참여와 중도포기 등의 일련의 행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억제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섯째, 자기자신을 자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특징들은 학습상황에서의 이상적인 자율성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두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것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며, 학습자 개인의 특성과 학습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볼 때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이란 청소년이 이성적 사고에 기초하여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며, 자신이 선택한 행위를 자유의지에 따라 의연하게 실행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역량(competence)이란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환경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안녕감(well-being)을 극대화하며, 미래의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knowledges), 기능(skills), 태도(attitudes), 동기(motives), 능력(abilities)의 복합체를 말한다(Garbarino, 1985). 그리고 역량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새로운 상황에 지식과 기술을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OECD(2005)에서는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핵심역량(key competenceies)을 선정하면서, 핵심역량의 세 가지 범주 중 하나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기(act autonomously)’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 정체감을 확립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DeSeCo프로젝트에서는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의 하위요소로 ①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 ②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③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등 3가지를 설정하고 있으며 각 하위요소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기’란 개인이 속한 다양한 체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개인의 행동이 체계에는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생애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란 생애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수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행동하기’란 현재 나의 위치에 따라 주어지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절대적으로 옳은 사회규칙과 질서는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면 아무도 권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과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끊임없이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흥미와 관심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규칙과 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김기현 외, 2008).

〈표 II-9〉 자율적 행동 역량의 하위요소 및 행동준거

하위요소	세부항목	행동준거
거시적 맥락속에서 행동하기	패턴이해	•사회변화와 일련의 결과 이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행동결과 이해
	체계이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이해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관심
	행동결과 인지	•미래예측 및 이에 따른 행동계획 수정 •행동의 결과를 미리 생각
	행동선택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정당하다면 행동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관련성 이해
생애목표 및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목표 및 과제설정	•구체적인 목표와 과제 존재 •목표수립 과정에 다양한 자원 활용
	계획수립	•스스로 계획수립 •계획수정 필요시점 판단 및 계획변경
	수행	•자신이 계획한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함 •난관이 있더라도 하는 일을 마무리
	평가	•계획한 일을 스스로 평가 •평가결과를 차후에 반영
권리, 이익의 한계를 알고 요구하기	흥미이해	•좋아하는 관심분야를 앎 •관심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할지 앎
	규칙과 원리 이해	•법, 규칙, 사회의 이치 이해 •주어진 사회적 역할 이해
	욕구와 권리 주장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앎 •욕구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방법 앎
	대안제시	•모두를 만족시킬 때까지 많은 대안 존재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많은 방법 시도

※ 출처: 김기현외(200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 역량’이란 청소년이 이성적 사고에 기초하여 자신과 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며, 자신이 선택한 행위를 자유의지에 따라 의연하게 실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지식(knowledges), 기능(skills), 태도(attitudes), 동기(motives), 능력(abilities)의 복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DeSeCo 프로젝트에 기초해 볼 때, 지식기반 현대사회에서 ‘자율적 행동역량’과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은 3가지 하위영역 즉, ①거시적 맥락에서 행동하기, ②생

에목표와 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하기, ③권리와 이익의 한계를 알고 행동하기라고 할 수 있다.

(2) 자율적 행동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현황

청소년의 역량개발은 청소년문제 예방의 차원을 초월한다. 청소년들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청소년의 역량을 완전하게 강화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청소년관련 정책은 역량개발의 기회제공보다는 결핍모델(deficit model)에 초점을 두어 왔다. 즉 대부분의 청소년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의 위험상황이나 문제행위를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이들 문제예방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이 현재 또는 미래에 당면하게 될 도전과 사회적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1990년대에 들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육성정책의 이념에서는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민주·복지·통일 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을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소수 문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 예방,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대다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육성·지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정책추진 전략 역시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 보면서 “성인주도·정책대상의 청소년”에서 “청소년참여·정책주체로의 청

소년”으로 전환되었고,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확대를 중요한 정책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정책이념들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사업과 프로그램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역량과 관련된 정책사업 중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활동,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청소년자치참여활동(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공모지원사업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청소년문화존 조성사업

청소년문화존은 주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에 따라 늘어나는 청소년의 방과후 시간대에 청소년들 스스로 전국의 광역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향수, 문화감성, 문화창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 매칭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며, 2004년과 2005년은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었고, 2006년 11개, 2007년 41개, 2008년 106개로 확대되었으며, 연간 총사업비 36억원 규모(2007년의 경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안의 부재로 청소년문화존의 통일된 개념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시·도별로 지역자체의 운영형태를 결정하도록 하였지만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된 공간조성 모델과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②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 활동은 수업시간에 하지 못하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함으로써 교우관계를 넓히고 건전한 인성을 계발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시설 및 각 급 학교(초·

중·고·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2005년부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지도자를 파견하거나 활동장소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180개 청소년시설 동아리, 전국 초·중·고 526개 동아리가 지원을 받았다. 또한 청소년의 달(5월)에 개최하는 한강청소년동아리문화축제, 전국 7개 권역에서의 동아리문화마당,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등 다양한 동아리지원활동을 통하여 동아리문화 확산과 새로운 청소년 문화 형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2008. 보건복지가족부).

③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부군인 필립 공에 의해 1956년 설립되어, 세계최초 에베레스트 등반자인 헛트 경과 독일 교육학자 쿠르트 한 박사의 지도 아래 처음 운영된 이래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2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목적은 만 14-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지역 및 세계 사회에 이바지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단체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운영되는 주요한 국제 프로그램으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아 발견, 성장, 자립, 인내,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사회에 대한 참여활동을 고취시키는 균형 잡힌 비경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는 국제선언(The International Declaration)이 있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운영원칙은 참여 청소년의 연령은 반드시 14세~25세 사이여야 하며, 4개의 활동 영역(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단련활동, 탐험활동)과 3가지 포상단계(동장:14세 이상, 은장:15세 이상, 금장:16세 이상)로 구성되어 있다. 신입 회원의 최소 참여기간은 동장 참가자는 6개월, 은장 참가자는 12개월, 금장 참가자는 18개월이다. 별도로 금장 참여 청소년들은 집에서 떨어져 숙박하는 합숙훈련을 수행해야 한다. 국제청소년성취포

상제는 비경쟁성(non-competitive), 평등성(available to all), 자발성(voluntary), 유연성(flexibility), 균형성(balanced program), 단계성(progression), 성취지향성(record of achievement), 과정 중시성(value of process), 지속성(narathon not a sprint), 재미(enjoyment)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시작하였으며, 2009년 현재 한국 사무국은 한국 청소년진흥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포상을 담당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위인 운영기관(LO: Licensed Operators)이 2008년 15개에서 2009년 41개로 대폭 확대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④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매몰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과 준비 등을 위해 1995년부터 제도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996년에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에는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13년째에 이르고 있다.

<표 II-10> 2008년 청소년자원봉사 참여율

구분	정책대상자 수	가입인원	활동실적	1인당 봉사횟수	종합실적 (활동+교육+등록)
합계	10,494천명	197,175명	2,417,017건	12.3회	2,642,146건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특히 주5일 수업 확산 등으로 청소년의 여가활동 정보수요가 급속하게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위주의 정보제공만으로는 청소년 및 부모의 활동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2006년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통합되었으며, 추진체계 역시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초·중·고

등학교의 학생들이 개별, 학년, 학급 및 동아리 단위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자원봉사 협력학교가 운영하고 있다.

⑤ 청소년자치(참여)활동

정부에서는 청소년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청소년 정책참여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소리기자단, 청소년옴부즈맨, 청소년의회 등이 있다. 이들 모두는 최근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신설되거나, 강화된 정책참여 기구들이다. 이 중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왕성하게 청소년정책참여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적인, 범부처적인 특성을 갖는 참여기구로 분류될 수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참여기구의 성격을 띠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관련 수련시설의 정책 및 프로그램 참여기구의 성격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정책 참여기구 중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회의이다.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청소년정책 과정에 청소년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청소년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촉진하게 된다. 2004년도에는 시범회의, 2005년도에는 제1회, 2006년도에 제2회, 2007년도에 제3회, 2008년도에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제가 관련 부처의 정책대안 창출 및 추진으로 이어져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관련 부처들이 청소년특별회의를 계기로 유기적인 업무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청소년특별회의는 구성원의 대표성 문제, 정책의제에 대한 공감대 부족, 추진일정의 가변성, 대국민 홍보부

족, 구성원의 명확한 역할정립 미비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최창욱·조혜영, 2007).

둘째,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정책이나 활동에 대한 정책자문 및 건의와 다양한 자율·참여활동을 시행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치기구를 말한다. 즉, 청소년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제시와 자율 활동을 실시하는 청소년 자치조직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정책 대상인 청소년이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사례별 차이는 있으나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정책 모니터활동 및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청소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워크숍 개최와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활성화된 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사업을 기획·실행하기도 한다. 2008 아동·청소년백서(보건복지가족부, 2008c)에 따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162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구정평가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활동 하고 있는 청소년은 약 3,200명 정도이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은 공개선발과 단체 추천 등을 통하여 선발된 소수의 청소년 참여위원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한계,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선발 및 운영 방식이 난립하여 표준화된 운영모델의 없다는 점, 의견제시 또는 자문내용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최창욱·조혜영, 2007).

셋째, 청소년시설과 단체에서는 청소년이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수련시설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운영단체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목적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중심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시설 모니터링과 운영에 참여하며, 1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활동백서’를 발간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07년까지 총 2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표 II-11>.

<표 II-1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현황(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58	40	13	8	11	6	10	6	46	25	14	11	16	11	10	15	16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c)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자치조직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참여기구 간 차별성과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청소년 친화적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참여기구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의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최창욱·조혜영, 2007).

⑥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직업준비,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는 공모에 참여한 609개의 프로그램 중 146개의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였다. 분야별로는 청소년문화활동분야 102개(69.9%), 찾아가는 활동프로그램 14개(9.6%), 두드림 30개(20.5%)이다. 영역별 프로그램은 문화감성이 40개(27.4%)로 가장 많으며, 봉사협력 22개(15.1%), 방학 21개(14.4%)순이며, 과학정보 영역은 7개(4.8%)로 가장 적게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3) 자율적 행동 역량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① 자율적 행동 역량과 능동적 복지의 관계

능동적 복지란 기존의 잔여적 측면의 복지뿐만 아니라 보편적 측면의 복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개인 및 사회의 책임과 의지 및 능력을 중요한 덕목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능동적 복지에서는 “능동적”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능동의 주체는 국가, 시민사회, 가족 및 개인이며, 능동적 복지에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수행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를 위해 능동적 복지에서는 역량강화의 기회확대와 개별화된 전문서비스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8b). 이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능동적 복지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기존의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의 능동적 복지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요인의 발생과정에 사전에 개입함으로써 능동적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결국 능동적 복지는 전통적인 복지제도를 적절히 운영하면서도 능동적인 사람(active people)에 의한 능동적 사회(active society)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능동적인 정책(active policy)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능동적 복지에서는 ‘능동적 개인(active people)’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적 행동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능동적 복지에서는 개인이 사회경제적 삶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개인이 사회주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능동적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결국 능동적복지에서 강조하는 능동적 개인은 자율적인 행동역량을 갖춘 개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능동적 복지는 자율적 행동역량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능동적 복지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는 단순한 ‘투입-산출’, ‘수단-목적’의 관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물론 자율적 행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 복지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능동적 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행동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자율적 행동역량은 능동적 복지의 정책적 목적임과 동시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능동적 복지와 자율적 행동역량의 관계는 ‘자율적 행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 복지’임과 동시에 ‘자율적 행동역량에 의한 능동적 복지’라고 정리할 수 있다.

② 자율적 행동 역량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이념은 “문제예방”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육성·지원”을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정책추진 전략도 “성인주도·정책대상의 청소년”에서 “청소년참여·정책주체로의 청소년”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참여 확대가 중요한 정책추진과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정책이념들은 최근 역량개발의 측면과 연계되면서 다양한 정책사업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적 행동역량을 강조하는 정책이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구호로만 그치는 경향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들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율적 행동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능동적 복지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리모델링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정책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역량강화를 위한 그리고 자율적 행동역량에 의한 능동적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의 자율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기존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잔여적 복지의 차원에서 위기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시혜적 복지정책이 대부분이었으며,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도 표면적으로는 청소년의 자율성과 권리보장,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수립의 과정에서는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정책에서 자율적 행동역량의 강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패러다임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역량 강화는 막연한 구호로 달성될 수 없으며, 매우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예컨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전반에 ‘자율적 행동역량 강화’라는 관점이 스며들어야 한다. 자율성은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다. 자율적 행동역량은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고 체화되고 축적되고 확장되는 것이라면, 능동적 복지 역시 이러한 자율적 행동역량의 특성에 기초하여 기존의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의 운영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아동·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실행되는 실천현장에서 이를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능동적 복지라는 정책적 패러다임이나 철학, 원칙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지만, 실천으로서의 능동적 복지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특히 능동적복지가 추구하는 맞춤형 복지는 자율적 행동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개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개별화를 바탕으로 자율적 행동역량이 성장되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획일화된 운영시스템이 사라져야 한다. 자율적 행동역량의 수준은 청소년 개개인마다 매우 상이하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율성은 청소년의 내부적 요인 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자율적 행동역량의 수준과 아동·청소년이 처해 있는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현장의 서비스제공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활동정책을 청소년중심의 활동으로 전환시키고, 청소년의 주도성과 참여가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자발적·주체적 참여에 기초한 교육적 경험이어야 한다. 즉,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을 선택하여 결정하며, 나아가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이 의무화되거나 강요되어 타율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에

표면적인 혹은 내면적인 저항감을 느끼게 되고, 청소년활동이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리고 타율적 참여는 청소년활동의 효과나 청소년들의 만족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은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동인(motive)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활동은 학교교육과 같이 외부강요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자각적 자발성에 기초한 자기도 야인 동시에 자유로운 이성인지에 의한 참여에 기초한 교육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활동참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성장해 나가는 청소년활동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활동결과를 중시하는 청소년활동에서 활동과정을 중시하는 청소년활동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패턴이해·체계이해·행동결과 인지·행동선택 등 자율적 행동역량이 생성되고, 표출되고, 축적되는 장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역량 강화와 관련된 자원의 확보와 연결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자율적 행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타율적 행동을 자율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이웃, 친구, 성직자, 사회복지사, 형제자매, 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 ‘사람’과 ‘장소’와 ‘자원’이 요구된다. 타율적·수동적 행동이 자율적·능동적 행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전환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그들을 잡아주고 지켜주는 성인과 개인적인 접촉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처럼 자율적 행동역량 강화를 지원해주는 사람과 자원들이 보살핌적 이면서도 존중하고 조력한다면, 그리고 청소년에게 적극적인 의사결정자로서의 지속적인 책임을 부여한다면, 청소년은 자율적 행동과 자기통제, 책임감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복지정책 실천현장에서는 이들 자원들이

청소년과 동맹관계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자율성을 사용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실천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3) 지적 도구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1) 지적 도구활용 역량의 개념과 내용

DeSeCo 프로젝트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 중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역량(use tools interactively)은 세 가지 하위 차원의 핵심 역량으로 구성된다 <표 II-12>.

<표 II -12> 도구적 상호작용 생애핵심역량 구성

영역	중요한 이유	핵심역량
도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Use tools interactively)	- 기술변화에 적응 - 개인적 목적에 맞게 변화 유도 - 세상과 적극적으로 대처	-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출처: Rychen & Salganik(2003)

여기서 ‘도구’란 정보화 사회로 지칭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그를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으로, 언어·정보·지식으로서의 사회 문화적 도구와 컴퓨터와 같은 물질 도구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폭 넓은 의미의 용어이다. 즉, 상호적으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구를 통해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나아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기현 외 2008).

DeSeCo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적도구 활용과 관련된 핵심역량의 첫째는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 직장, 사회 등의 다양한 삶의 국면 속에서 언어기술, 계산, 각종 수학적 기술(그래프, 표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 및 사회관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

두 번째 핵심역량은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과 획득된 정보를 효과적이고 신뢰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은 개인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척도이다.

마지막 핵심역량은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어진 대상을 인간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더욱이 오늘날 기술분야(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는 현재의 기술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개방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등(2008)은 DeSeCo 프로젝트의 정의에 기본적으로 따르되, 청소년기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지적 도구 활용역량을 <표 II-1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13> 지적 도구 활용 관련 청소년 생애 핵심 역량 지표

구분		개념
언어, 상징, 문자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읽기 능력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쓰기 능력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
	말하기 능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
	듣기 능력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외국어 능력	외국어로 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듣기 능력 그리고 외국어로 글 쓰며 말로써 의사소통하는 능력

<표 계속>

구분		개념
지식과 정보를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수리 능력	현재와 미래의 개인 생활, 직장 생활, 그리고 동료와 친지간의 사회생활 등에서 건설적이고 우호적이며, 사려 깊은 시민으로 생활하기 위해 수학의 역할을 식별하고 이해하며, 수학을 사용하여 근거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과학 능력	우리 주위의 자연과 인간 활동에 의한 자연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문제를 인식하며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능력
기술을 상호적으로 사용하기	정보 활용 능력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며, 의미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컴퓨터나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기술 활용 능력	도구, 장치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기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능력
	기타 능력	위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도구 활용과 관련한 하위 요소

출처: 김기현 외(2008)

(2) 지적 도구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현황 분석

지적 도구활용 역량과 관련된 정책현황의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중 저소득계층이나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6개의 정책 사업을 분석하였는데, 그 세부적인 사업명은 <표 II-14>와 같다.

<표 II-14> 지적 도구 활용 역량관련 정책현황 분석 대상 사업

구 분	사 업 내 용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교사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야학(비정규학교) 운영

①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금전지원의 확대만으로는 아동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예방적인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나가는 대표적인 아동 복지정책이다. 가난한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프로젝트’는 최근 가정 해체, 사회 양극화 등으로 인한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 정책이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c).

기존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발생 이후 단편적으로 개입하는 사후관리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다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빈곤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전 예방 및 통합적 아동보호서비스로 능동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들에게는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들에게는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은 2007년에는 전국 16개 시범지역에서 실시하였고, 2008년에는 32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②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지역사회 빈곤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어 왔으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으로 양질의 교사 확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어 한계점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빈곤 아동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체계 구축을 목적을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교사를 사회적 일자리로 선발하여 지역아

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2009년에는 약 2,700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였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전일형 및 프로그램형으로 지원하며, 지원분야는 전일형(아동·청소년지도, 보건위생)과 프로그램형(기초학습,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능활동, 체육활동, 지역사회복지사)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서비스 내용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지적 도구 활용 역량 강화와 관련 있는 교사 분야와 활동내용은 <표 II-15>와 같다.

<표 II-15>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과 지적 도구 활용 역량 개발

영역	교사분야	활동내용
학습	기초학습교사	- 자기주도학습, 학습코칭 - 수준별 학습지도 - 학습부진아동 지도 - 초등/중등 과목 지도
	기초영어교사	- 기초영어 및 초등영어 - 그룹지도
문화	독서지도교사	- 아동의 독서능력 향상 - 그룹지도

③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 위치하여, 아동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여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5대 영역 즉 생활지원, 학습지원, 놀이 및 특별활동 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빈곤아동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들의 복지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센터로 자리 잡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현재 전국에 2,09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개소당 지원액은 월평균 220만원(급식비 제외)으로 국고 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교육적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 사업으로 구성되며, 아동 청소년의 지적도구 활용과 관련 있는 교육적 기능에는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 학습지도 하기,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지원 성과 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볼 수 있다.

④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수업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 소유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다. 2007년 현재 15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총 237.11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체계의 통합적 구축과 동시에 청소년 개발의 책임을 학교·가정에서 지역사회로 일정부분 전환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요구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고 있으며, 지적 역량 강화와 관련 있는 주요 프로그램은 <표 II-16>과 같다.

<표 II-16> 방과후아카데미 사업과 지적 도구 활용 역량 개발

구 분	세부 내용
기본공통과정	자기주도학습(숙제지도·책임기 등), 주요과목보충학습
전문체험과정 (재량활동포함)	주중: 과학·탐구 등 특기·적성 교육 토요(등교토/놀토): 주5일제 관련, 전문체험활동

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공부방은 맞벌이·한 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학습 공간 제공 및 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중앙·지방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 서비스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전국에 3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공부방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제공, 학습지원,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활동 기회를 지원하고, 청소년지원 및 지역연계 활동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며, 이중 지적 역량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표 II-17>과 같다.

<표 II-17> 청소년공부방 사업과 지적 도구 활용 역량 개발

구 분		주요 프로그램
학습공간 제공		열람실, 도서열람 및 대출, 정보검색
프로그램 운영	학습지원	국어, 영어, 수학 등 초·중·고 기초과목, 인터넷실 (EBS 시청 등)
	특기적성교육	논술, 한문, 독서지도, 음악, 미술, 컴퓨터, 악기 등
	문화·체험활동	현장체험활동(견학, 기행, 답사, 현장학습),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취미(종이접기, 요리, 미술, 레크레이션 등), 수련활동(캠핑, 야유회, 공동체 놀이, 청소년 교류 등)

⑥ 청소년 야학(비정규학교)

보건복지가족부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소년 야학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등교육과정(초등교육과정 제외)에만 해당하며, 연간 10개월 이상 운영(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하는 시설이다.

청소년야학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학습지도, 활동지원, 상담지원,

멘토 연결 등이 있으며, 지적 도구역량과 관련 있는 학습지도는 주로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과목의 학습을 지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3) 지적 도구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① 지적 도구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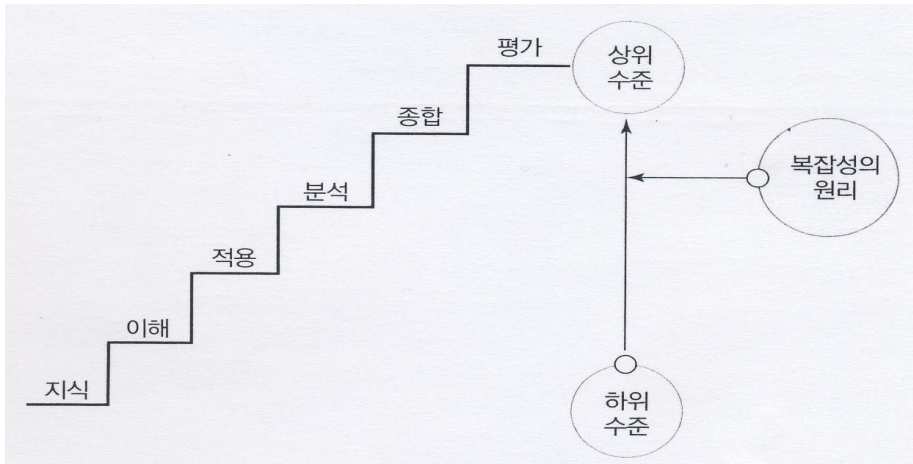
김기현 외(2008)에서 제시한 청소년 생애 핵심역량 지표는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능동적 복지가 지향해야 할 포괄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역량 지표에 대한 진술은 마치 나침반이 목적지를 가리키는 것과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능동적 복지 정책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능동적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내용, 즉 청소년들의 생애 핵심 역량이 보다 명료하게 규명되고 그 가치들이 차등화시켜 제시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 생애 핵심역량을 보다 명료화하기 위한 방법은 교육목표를 분류하고자 했던 Bloom, Anderson, Marzano 등의 노력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Bloom(1956)은 학교교육 목표의 구조와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분류학(Taxonomy)의 개념을 차용하여 교육목표를 처음으로 이론화하였다. 그는 교육으로부터 학생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나 의도를 내용과 행동차원으로 분류하여 진술하였는데, 교육 목표에 대한 평가는 물론 교육연구와 교육과정 개발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참여자들 간에 아이디어와 자료의 상호교환 증진에 기여하였다[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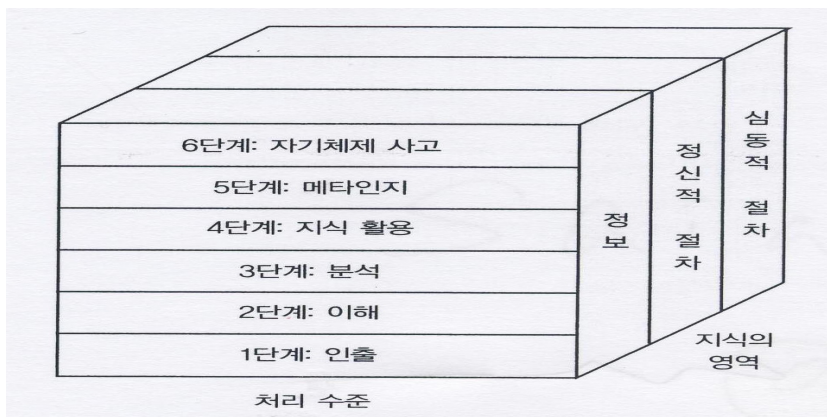
아동 청소년의 지적 도구 활용 역량은 그 영역의 성격상 계열화와 위계화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 따라서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이 갖는 의의를 지적 도구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 정책 적용한다면, 복잡하고 불명확한 정책 목표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능동적 복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I-4] 인지적 영역의 위계적 행동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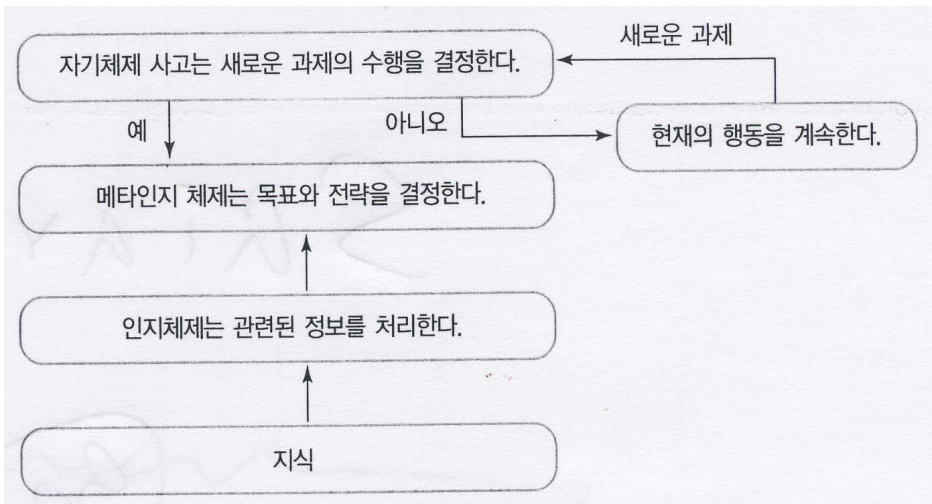
Bloom의 분류학의 위계적 구조의 전제, 즉 상위수준은 하위수준보다 어려운 인지과정에 관련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조망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Marzano(2000)는 신교육목표분류학을 [그림 II-5]와 같이 제기하였다.



[그림 II-5] 신교육목표분류학의 이차원 모형

Marzano는 세 가지의 지식 영역과 여섯 가지 수준의 정신적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이를 김기현 외(2008)가 제시한 청소년 생애 핵심역량 지표와 비교해보면, 지식의 영역 중 정보는 지적도구 활용영역에, 정신적 절차는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에, 심동적 절차는 자율적 행동영역으로 견주어 생각될 수 있다. 즉, Marzano의 신교육목표분류학은 지적 도구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입안시 고려해야 할 각 요소들을 상세히 밝히고, 그 순서성을 구분하는데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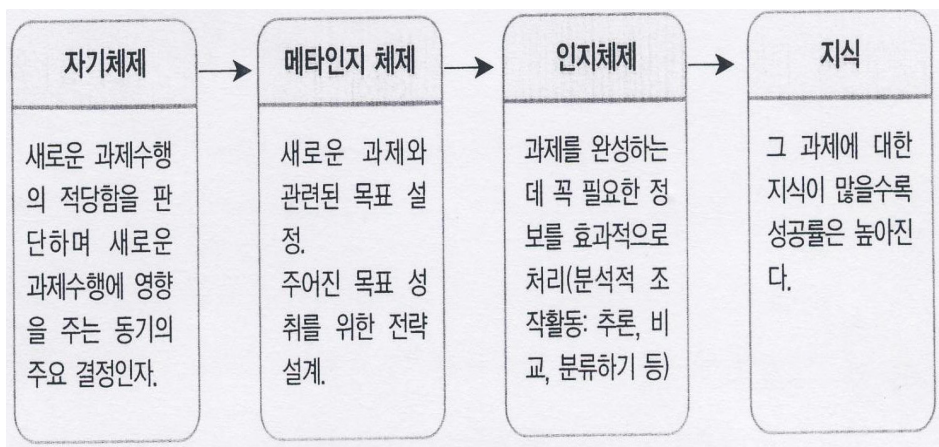
Bloom과 그의 동료들은 난이도를 목표 수준 간 차이의 기반으로 활용하려 시도했고, 이는 산업사회에 기반을 둔 교육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았지만, Bloom의 분류학만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복잡한 정신적 과정을 계열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된 그림이 시사하듯, 인간의 정신적 과정이 어떻게 관리되는가를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들의 지적 도구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 내용과 수준의 순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II-6] Marzano의 신교육목표분류학에 따른 인간 행동 모형

즉, 위 모형에서 정보의 흐름을 보면 정보와 행동의 처리과정은 항상 자기 체제에서 출발하여 상위 인지(meta-cognition)체제로 나아가며 궁극적으로 지식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즉, Marzano의 신교육목표분류학은 Bloom의 업적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구조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사고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음.

이렇듯 Marzano의 이론은 아동과 청소년의 지적 도구 활용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의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생애핵심 역량 중 지적도구 활용 영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해당 정책을 통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많은 지식을 획득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 이전에 청소년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스스로 자각하고,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명료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II-7].



[그림 II-7] 인지체제들 간의 관계

Marzano의 아이디어를 근거로 볼 때 지적 역량을 강화하는 능동적 복지정책이 지적 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에서 상위요소로 접근되는 것 보다는 인간의 인지 체제들 간의 관계와 중요성을 근거로 접근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표 II-18>.

〈표 II-18〉 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 정책 결정시
고려할 우선 순위

신분류학의 여섯가지 수준		지적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결정 우선순위
의식적 (능동적) ↑ ↓ (수동적) 자동적	수준 6: 자기체계과정	1
	수준 5: 메타 인지 과정	2
	수준 4: 지식 활용 과정	3
	수준 3: 분석 과정	4
	수준 2: 이해 과정	5
	수준 1: 인출과정	6

② 지적 도구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의 과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능동적 복지정책의 주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우선 빈곤, 질병, 가족해체 등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사회적 위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국민으로서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역시 능동적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복지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수동적 대상자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개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의 지적 도구 활용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의 지적 도구 활용을 위한 예방적 접근이다. 가족해체, 소득의 양극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는 아동의 상대적 빈곤 문제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빈곤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중요한데, 그 중 지적 도구 활용역량은 아동이 갖게 될 미래 삶의 성공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또한 다른 두 영역, 곧 이질적인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기와 자

울적으로 행동하기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은 비선형적, 비순차적으로 접근·증진이 가능한 반면에, 지적 도구 활용 영역은 한 번 결핍되면 후속하는 역량의 개발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적시에 복지 혜택을 받아, 지적 도구를 활용하는 영역의 역량이 개발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빈곤의 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지적 도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균등한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지적 영역을 구성하는 상당 부분의 역량은 현재 학교교육보다는 학교 밖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동의 지적 도구 활용 역량 습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를 개발하기 위한 능동적 복지 정책은 모든 아동, 특히 빈곤·취약 아동 및 위기 청소년들이 지적 도구 활용 능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적도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들의 생애 단계별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 능동적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아동·청소년들의 제반 특성 및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가 극대화 되어야 한다. 즉 필요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서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복지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곧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서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의미를 갖는다. 첫째, 사회에 순 기능하고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게 돕는 것이다. 둘째, 이렇게 성장한 우수한 인적 자원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적 영역의 역량은 그 특성상 상당 부분 계량화와 표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 복지 정책의 체감만족도 향상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1.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2.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3.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 추진방안
4. 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III. 취약·위기계층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1.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3)

1)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최근 사회적으로 핵심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역량을 저해하는 가족 해체, 빈곤 가정,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환경적 요소들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빈곤계층의 확대와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는 아동·청소년에게 매우 부정적인 환경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빈곤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6세에서 17세의 아동·청소년은 7,872,564명으로 그 중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이들은 약 8.8%인 691,99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c). 이러한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역량을 지닐 가능성 높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돌봄 사업을 들 수 있다. 돌봄사업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 활동, 보육, 보건,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을 의미하며, 이는 2008년 정부의 정책기조인 능동적 복지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능동적 복지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가 아닌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복지를 뜻하므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증진시키는 돌봄사업과 관련성이 높다.

3) 이 부분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연구 보고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구체적인 사업들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학습위주의 교육이 아닌 다양한 활동 위주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전반적인 지도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비스이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청소년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산부 및 0-12세 대상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전문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각 시·도에 분포되어서 보호와 돌봄, 그리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각 지역의 아동·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돌봄사업은 2007년까지 정부부처가 달리 운영되었고, 2008년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현재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정책부서가 통합되어 대상층과 서비스가 유사한 정책을 동일한 정부부처에서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저소득계층의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즉,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사업의 개요와 외국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돌봄사업 정책을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 재정측면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돌봄사업의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현황

(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 의무, 책임을 배울 수 있는 전인적 성장발달을 도모함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2005년도 시범사업(46개소)을 시작으로 2008년도 190개소에서 약 7,526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과정은 크게 기본공통과정, 전문체험과정, 특별지원활동, 생활지원으로 구분된다.

(2)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에 명시되어 있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3,274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에 돌봄이 필요한 94,406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 생활지원 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놀이 및 특별활동 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3)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복합적 욕구를 지닌 서비스 대상자에게 포괄적, 체계적,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실천 모델로서(보건복지가족부, 2009b),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임산부와 0세~만 12세 미만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및 교육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드림스타트는 2008년도 32개 센터에서 약 9,248명의 아동·청소년에게 건강, 복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8a).

3) 국외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사례

(1) 미국

미국의 아동·청소년 돌봄사업인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과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21st-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조기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헤드스타트는 저소득 가정의 산전태아건강을 위한 서비스부터 0세에서 3세, 혹은 5세에 이르기까지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건강한 가족기능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따라서 빈곤계층 유아에게 중류계층의 또래 유아들처럼 일반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후원을 함으로써, 계층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불이익이 학교 입학 전에 감소될 수 있도록 조기부터 개입하는 것이다.

둘째, 방과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교육적 차원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즉 신체 및 정신 건강, 영양 및 사회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약물과 폭력 예방, 상담, 미술, 음악, 여가, 테크놀로지 등의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통해 궁극적으로 학령 전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헤드스타트는 지난 40년간 미국사회의 대표적인 영유아정책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다인종·다문화를 수용하는 확실한 사회통합의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대상의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이로 인한 프로그램 성과가 나타나 정책수혜 대상도 수정 및 확대되었다. 이것은 성공적인 사회공익 프로그램의 모델로서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적용 대상과 방식이 어떠한 형태로 변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사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21세기 지역사회학습센터는 지역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학습센터로서 학교기능을 강화하였고, 해당 학교 학생들만이 아닌 지역의 여러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 특성을 살린 학습 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학교는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공립학교들이 점점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다.

(2) 일본

일본의 ‘방과후 아동 플랜’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아동·청소년 돌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개 부처에서 진행되던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했다는 점이다. 2006년 ‘방과후 아동 플랜’을 통해 일본의 아동·청소년 돌봄사업은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에서 추진하던 방과 후 교실과 후생노동성 고용균등과에서 추진해오던 방과 후 아동건강육성사업을 일원화하고, 지자체에서 통합, 연대를 추진케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 정책기구 내 돌봄사업에 대한 통합을 통한 서비스제공이 요구되지만, 점진적으로는 각각의 정책기구 내의 사업들에 대한 조정을 통해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업의 통합에 따른 서비스 연계를 위한 거점 마련과 담당인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양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함으로써 학교나 관계기관 등의 연락조정, 자원봉사의 협력자 확보, 등록, 배치, 활동프로그램의 책정들을 실시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수행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을 위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효과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셋째, 지역사회 내 적극적 연계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학교와 연대·협력을 통해 학교관계자와 사업관리자 간의 신속한 정보교환, 정보공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양 사업은 학교교육의 하나로 위치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업의 관리운영은 실시주체인 시정촌, 민간단체가 책임을 가지고 시행한다. 또한, 여유교실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하고 있다.

(3) 영국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정책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특정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돌봄사업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슈어스타트의 주요 대상 집단은 5세 미만의 아동, 특히 저소득층으로서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아동 및 그 가족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하여 낙인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현재에는 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 취업, 미혼모 지원 등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둘째,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슈어스타트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슈어스타트국(sure start unit)을 두어 슈어스타트의 방향제시와 관리 역할 등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의 슈어스타트 서비스 전달은 먼저 지역사회의 비영리 및 민간기관, 보건 및 고용기관 등 지역사회 관련 자원들의 참여를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계획을 확정하고, 다시 지방협의체와 함께 재정조달의 계획과 분배 방법을 수립한 다음 각 서비스 공급자에게 재정을 배분한다. 즉, 사업의 맥락은 같이하

지만 지역사회별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4) 아동·청소년 돌봄사업에 관한 정책분석

(1) 전달체계에 관한 분석

①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

공무원의 잦은 교체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으로 돌봄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드림스타트는 센터에 공무원 3인과 민간 전문인력 3인을 둬으로써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드림스타트의 경우도 전담공무원의 겸직 비율이 높고 인사이동이 잦은 편이어서(김승권 외, 2008a)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동일한 운영주체 내에 서로 다른 형태의 돌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과 함께 사업들 간 조정 및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8a). 즉, 다양한 수행기관이 같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들 간 조정 및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동일한 운영주체 내의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조정 및 통합의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부 등의 유사사업들과의 조정 및 통합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어서 향후 점진적 조율이 필요하다.

운영체계 및 전달체계에 있어서 또 다른 한계는 일부 사업의 경우 신고제로 인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만 시설의 설치·운영에 있어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신고만 하면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행기관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서비스의 전문성 측면에서는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② 인력현황 및 자격요건

돌봄사업 간의 담당인력 선발기준이 상이하여 사업 간 그리고 사업 내 인력의 전문성에 차이를 나타내고, 서비스 질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 PM과 SM은 청소년지도사를 중심으로 채용하되 지도사가 없을 경우, 그 외 관련분야의 전공자를 채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을 중심으로 채용·운영된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민간 인력)는 관련분야 자격증이나 학위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되 자격증, 학력조건 충족자가 없을 경우, 관련분야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담당인력 선발기준은 인력 간 역량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서비스의 질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담당인력 선발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③ 전문인력의 근무여건

담당인력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다른 전문직종과 비교하였을 때, 담당인력은 부족한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유사기관 종사자들보다도 현저히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주6일 이상인 곳도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의 PM과 SM,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그리고 드림스타트의 민간 전문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고 있어 이들의 근무여건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방과후아카데미 담당자들은 주6일 동안 근무하면서도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고 신분 보장도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뀐다면 수요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매우 어렵다(한국행정연구원, 2008).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가 열악하여 종사자의 직무만족도를 저해하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이태수 등, 2009). 드림스타트의 경우도 전담공무원에 비해 민간 전문인력의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으므로 근무여건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승권 외(2008a)는 드림스타트 센터마다 편차가 존재하나 전담공무원의 겸직비율과 인사이드가 잦은 편이고, 비공무원의 고용 보장이 안정적이지 않아 이직률도 높게 발생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업무량이 소수인력에 집중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④ 지역별 분포도

돌봄사업 수행기관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 복지, 문화, 활동, 보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밀한 수요·공급의 조사와 분석 없이 설치되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는 2008년을 기준으로 185개소 중 경기지역이 31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 지역에 24개소가 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 등이 없는 농·어촌의 경우 설치·운영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2008년 2,810개소를 기준으로 경기지역이 561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북과 전남이 288개소, 서울이 284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다른 수행기관들에 비해 가장 많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수행기관의 설립기준이 불명확해 시설 난립과 부족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드림스타트의 경우는 2008년 32개소 중 경기와 전남지역이 4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광주, 경남지역 3개소 그리고 서울 등이 2개소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 시작년도가 짧은 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센터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사 서비스인 위스타트 마을,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을 운영하는 읍·면·동을 제외하고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유사 서비스와의 중복을 피해서 확대되고 있지만(보건복지가족부, 2009b) 그만큼 센터의 수는 부족하다. 그리고 돌봄사업은 대체로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모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지역별로 다양한 운영모형(농산어촌, 일반, 지원, 통합)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운영 기준을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의 경우는 아직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준이 없다. 향후에는 지역뿐 아니라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운영모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⑤ 연계협력의 정도

돌봄사업은 경찰서,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수행기관들 간 연계 및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지역 내에 유사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대부분 존재하고 있지 않다. 지역 내 사업수행기관 간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동·청소년을 위해 좀 더 생산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은 그나마 대도시에서나 가능하다. 농·어촌의 경우는 유사 수행기관 마저 없어 연계와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대상에 관한 분석

① 돌봄사업의 대상자

돌봄사업은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원하지만, 아직까지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세~17세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은 약 177만 8천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원은 약 9만 9천명(2008년 기준)으로 아직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167만명 이상이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학교와 보육 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수를 합산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모두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② 연령별 돌봄사업의 이용자

사업들 간 서비스 대상자가 많은 부분 중복되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연령대가 모두 중복이 되며, 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는 중학교 1, 2학년 연령대가 중복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는 초등학교 연령대 모두가 중복되는 것을 현황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돌봄사업 이외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부 등의 유사 사업들 또한 대상 연령대의 중복이 있다. 연령의 중복은 한정된 재원으로 서로 다른 사업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돌봄사업의 선정기준으로는 중3 이후 연령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드림스타트는 서비스 대상자를 12세 미만으로 두고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 연령대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중·고등학생 연령대의 이용자는 2008년도 기준으로 전체 이용자 중 약 18%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중학교 1, 2학년 연령대의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08년 기준으로 약 15%정도이다. 이는 사업의 선정기준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의 방과후사업 강화,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지 않는 서비스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한 결과이다.

③ 계층별 돌봄사업의 이용자

돌봄사업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에 매우 밀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만이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형이 있다. 하지만 전국에 3곳밖에 없고 이용자도 전체중 약 2%에 머무는 등 대부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일부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과후’라는 명칭으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하는 아동·청소년들도 늘고 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탈학교 아동·청소년의 경우 ‘방과후’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저소득층의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여도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같이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아동·청소년들은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3)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

① 돌봄사업의 목적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그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지원함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들의 목적이 유사하여 대상 및 내용 등에 있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사업들은 모두 초등학교 4, 5, 6학년 연령대가 모두 중복이 되며, 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는 중학교 1, 2학년 연령대가 중복 된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는 초등학교 연령대 모두가 중복되고 있다. 또한 사업들 모두 저소득, 위기, 취약계층 등의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② 돌봄사업의 세부내용

사업내용에 있어 문제점으로 시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정해진 내용에 따라 운영되는 일부 사업은 프로그램이 경직되어 운영될 수 있고, 반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사업은 기관 혹은 지도자의 역량과 자질, 철학 등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좌우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즉, 대상별, 연령별 등에 따른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대상자 연령의 구분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현재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만이 2008년부터 농산어촌 운영모형이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③ 돌봄사업의 이용시간

방과후아카데미는 평일 15시~22시, 토요일 12~19시, 휴무토요일 9시~16시까지 운영한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기중 12시~20시, 방학 및 공휴일 10시~18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에는 2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지역의 여건과 센터의 실정에 따라 운영된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연계서비스, 직접서비스, 통합서비스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사업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탈학교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이용시간 확대 및 탄력적인 운영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잉여시간에 시설을 개방하여 활용하는 것도 어렵다. 한편, 저녁 늦게까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에 대한 귀가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일부 수행기관도 존재하고 있다.

④ 돌봄사업의 효과성과 만족도

돌봄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 복지, 교육, 건강,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균형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즉, 사업들은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향상, 사교육비 절감 및 학업성취력 증진, 여성의 사회진출 기여 등에 도움이 되고 있다(김승권 외, 2008a). 반면,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욕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편적 조사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욕구조사는 아동·청소년과 부모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욕구조사 결과는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사업들은 대상 아동·청소년과 부모의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⑤ 돌봄사업의 시설 및 물리적 환경

시설 및 물리적 환경 기준은 사업들마다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행기관들은 대체적으로 활동공간이 부족하고 물리적 환경도 열악하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는 일일평균 아동수가 2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최소 60㎡이상의 전용면적을 갖춰야 하지만, 60㎡미만이 114곳 이상이며, 이러한 센터가 전체 중 약 10%나 있다. 그리고 전용면적 82.5㎡이상이면 20인 이상도 가능하지만, 동일 면적에 이용아동수가 21명일 수도 있고 49명일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약 8.4%(166개)이며, 반대로 4, 5, 6층의 높은 곳에 센터가 위치한 곳도 약 6.7%가량 된다. 한편, 드림스타트의 경우는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센터별로 시설의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⑥ 돌봄사업의 평가체계

사업들은 평가로 인해 담당자의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혹은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있다. 또한, 중앙 차원의 평가로 인해 수행기관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자치단체장의 사업 의지가 약해지는 등의 문제도 일부 나타나기도 한다.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체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사업은 평가결과를 통해 개별 수행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지만, 일선기관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형식적인 평가에 머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4) 재정에 관한 분석

① 돌봄사업의 예산

돌봄사업 간 재정 지원액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수준, 지도자의 처우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사업들 간 지원액 차이는 국비지원액 자체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지만 이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즉,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 운영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동일 사업 내에서도 지역 간에 지원예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방비 예산 편성이 국비보다 많게 지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 이외의 민간 재정의 지원 차이도 동일 사업 간 지원액의 편차를 발생시킨다.

방과후아카데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거의 운영되며, 지역이나 기업의 후원금 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표준운영비가 적절하게 책정이 되어있지 않아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고에서 지원받는 기관은 약 86% 정도이며, 아동 1인당 지원금액도 적게 책정되어 있다. 현재 정부지원은 국고보조와 급식비보조를 포함해 69.7%이며, 나머지는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고보조 역시 2인 중 사자 급여를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드림스타트의 경우는 지원이 더 필요한 센터와 덜 필요한 센터를 구분 짓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 센터에 맞는 차별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부 사업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후원금 사용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자란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수행기관에 회계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담당인력의 회계처리 능력마저 부족하며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② 돌봄사업의 세부예산 편성

원활하게 돌봄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현재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방과후아카데미 경우 40인 기준으로 총예산(2009년 기준)은 초등과정 144,320천원, 중등과정 150,820천원이다.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강사비, 급식비(34,200천원), 운영비(11,400천원), 특별지원금(4,970천원)이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모두 동일하다. 연령대를 고려한 정밀하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인건비는 PM 1인이 연 21,600천원, SM 2인이 연 31,200천원으로, PM 1인은 약 월 1,800천원, SM 1인은 약 월 1,300천원을 받고 있다. 금액도 적지만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하반기 기준 인건비 12,000천원, 운영비 38,400천원과 40인 기준 급식비 약 33,840천원으로 총 84,240천원을 지원받아, 다른 유사사업들과 비교할 때 지원금이 가장 낮다. 또한, 세부예산 편성에 제시되고 있는 인건비 12,000천원은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이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50%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담 인력의 인건비도 100%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그만큼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서비스 비용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확충과 더불어 세부예산 편성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지원금 이외 민간후원(전체 예산의 약 11%), 자체조달(전체 예산의 약 12.8%) 등으로 예산을 조달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센터별로 총 3억원이 동일하게 지원된다. 2009년 드림스타트 예산실행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사업비가 전체 예산 중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전체 중 약 67%이다. 운영비에는 드림스타트 민간 인력 3인의 인건비(약 15%)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적인 운영비는 약 52%정도인 155,000천원이다. 드림스타트는 3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은 금액은 아니다. 또한, 민간 인력의 인건비는 약 15,000천원으로 이 역시 낮은 수준이다.

5)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개선방안

(1)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① 돌봄사업의 통합 및 기능 재조정

돌봄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허브기관이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과후아카데미와 드림스타트를 지역사회 내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방과후아카데미와 드림스타트는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왔고, 특히 드림스타트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허브기관은 지역의 인프라를 파악하고 배치·조정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각 기관 종사자들을 재교육하는 기능과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 단위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유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역 아동·청소년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 및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선정하여야 한다. 허브기관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즉, 방과후아카데미와 드림스타트가 없는 지역사회의 경우 특정 지역아동센터가 이 기능을 전담해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 및 기능 재조정은 당장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2년의 시범사업 실시가 요구된다.

둘째, 지역아동센터는 현행과 동일하게 직접서비스 수행기관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하지만, 현재 아동중심의 센터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별 아동·청소년의 수요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운영모델을 달리하여 아동중심센터, 청소년중심센터, 아동·청소년 혼합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지역여건과 시설의 지역분포 등을 파악하여 직접 서비스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서비스 수행이 방과후아카데미나 드림스타트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

셋째, 각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추진단을 통합해야 할 것이다. 방과후아카데미의 운영지원단, 지역아동센터의 지역아동정보센터, 드림스타트의 사업지원단을 아동·청소년중앙센터(가칭)로 통합하여 중앙 및 시·도 단위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센터는 돌봄사업의 장기적 계획 수립 및 기본적인 업무 지침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고 지원금을 확보하고, 시·군·구에 배치되어 있는 돌봄사업 허브기관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와 홍보, 종합적인 정보 관리 및 제공,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평가, 유사기관과의 상호연계 지원·지도 및 평가, 프로그램 시범 운영, 종사자 양성 및 교육, 각 시설의 인증제 도입의 검토 및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돌봄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돌봄사업이 국가의 공공사업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장기적 차원으로 본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학교와 보육의 경우도 돌봄사업과 유사한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거나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재조정

돌봄사업이 통합된다면 담당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또한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청소년지도사와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지닌 인력이 돌봄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의 경우는 아동전문가, 청소년전문가 등으로 서비스별로 세분화시켜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수에 따른 배치기준을 제안하자면, 이용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기존대로 시설장 1인을 배치하고,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경우는 시설장 1인, 담당자 2인을 구성한다. 그리고 30인 이상인 경우 시설장 1인, 담당자 3인 등으로 구성한다. 기존의 담당자보다 1인씩 추가한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특성별로 사례관리를 진행하거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최소 1인 이상의 아동·청소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해야 한다.

한편, 현재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 담당 인력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교사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에 포함시켜 외부지원 형식이 아닌 내부에서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형태를 변경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복지교사는 전국에 2,700여명이 있고, 자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 돌봄센터로 일괄 전환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사업담당 인력, 전문 강사, 사례관리 인력으로 다양하게 전환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소한 유사기관의 사회복지사 수준의 인건비로 상향조정 하면서, 신분보장을 위해 종사자들의 정규직화를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③ 지역상황에 맞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자치입법권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돌봄사업이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증제 도입은 기관의 전문성 결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검토는 내용 측면, 조직 측면, 절차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내용의 측면에서는 시설, 인력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 측면은 인증제 도입을 중앙 단위에서 시행할 것인지, 시군구 차원에서 실시할 것인지,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이다. 마지막으로 절차 측면으로는 초기 인증항목의 지표를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본 뒤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상의 개선방안

① 대상 선정기준의 재설정

돌봄사업의 이용자 대부분은 초등학생이다. 현 정부의 능동적 복지의 6대 기본방향 중 첫 번째 내용은 생애주기별 통합복지 실현이다. 돌봄사업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영아기 때부터 생애주기에 맞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통합 돌봄센터는 이용자 연령을 확대하여 중고등학생 연령의 대상자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돌봄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비교적 상세히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용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별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중 표적(target)집단 선별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를 갖고 있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등 집단의 특성에 맞는 선별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선별도구는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하고 적합성과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한 뒤 적용해야 할 것이다.

②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

돌봄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잔여적 복지모델이다. 보편적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서 서비스 수혜자로 하여금 낙인감을 받지 않게 하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 형태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능동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돌봄사업이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돌봄사업이

보편적으로 확대되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 물론 모든 아동·청소년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이 확보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은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돌봄사업이 장기적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확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서비스의 개선방안

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돌봄사업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단위에서 만들어진 기본 프로그램 매뉴얼과 함께 시설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앙 단위에서는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표준 프로그램 운영안을 제공하고, 개별 시설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및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사례관리의 강화

사례관리는 체계적인 욕구의 사정과정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실제적인 욕구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부족하고 교육을 실시할 교재도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지속적인 슈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례관리의 이론적 기초를 배우고, 실제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20-30명 되는 아동·청소년을 한명의 담당자가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사례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외부에서 투입되거나 사례관리 인력을 위한 추가예산 배정 혹은 다른 기관과의 연계 등이 대안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서비스의 물리적 환경 개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안전하고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전용센터나 청소년전용센터는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장비를 새롭게 구비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설의 전체 면적은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하는데, 아동전용센터의 경우는 최소 82.5m² 이상이 그리고 청소년전용센터는 최소 99m² 이상의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장실 시설, 프로그램실 환경, 식당의 환경에 대한 설치기준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④ 돌봄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토대 마련

돌봄사업은 일시적인 성격의 서비스가 아니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이다. 지속적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철학적 기반이 정립되어야 한다. 돌봄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시작된 서비스로 이론 및 철학적 기반을 먼저 정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정부 주도로 시작된 서비스이지만 법적 기반도 없이 사업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드림스타트 또한 시범사업을 마치고 시작한지 몇 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착할 수 있는 이론 및 철학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에는 돌봄사업의 종합적인 실천이론 및 철학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현황, 평가관련 정보,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 사업현황을 파악하여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각 사업 수행기관의 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며, 지역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4) 재정의 개선방안

① 재정 지원방식의 체계화

재정 지원방식을 체계화하여 점진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돌봄사업의 명확한 표준운영비 산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들은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지만 사업들 간 지원액의 편차가 심하고 편성기준이 상이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표준운영비 산출이 필요하다. 현재 방과후아카데미 세부예산을 기초로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인건비 항목은 동일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근무년수, 직급 등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대상별(아동, 청소년 등), 계층별(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지역별(도시, 농산어촌 등), 규모별(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등) 모델에 따라 운영비도 차등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운영비는 일괄적 지급 방식이 아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재정지원으로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기금설치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돌봄특별기금’을 마련하거나 ‘아동·청소년복지기금’을 지방조례로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의 후원자를 개발하거나 기업후원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재정의 투명성 확보

재정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 확보이다. 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는 매년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도 사회복지재무회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후원금이나 기부물품 등에 대한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운영함과 동시에 내부 및 외부전문가를 통한 세무확인제도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과 결산에 대한 자료를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③ 전자바우처 제도의 점진적 검토

전자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지불해 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단점을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서 저소득층의 이용료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질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돌봄사업의 경우 전자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전자바우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⁴⁾

1)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장애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스스로 자립함으로써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 주는 일은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그 가치도 또한 일반아동 대상 역량개발 연구보다 한 단계 낮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역량개발과 능력함양을 통해 미래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복지정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최근의 국제적 연구동향과 정책탐색을 통해 다양한 국내외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일반적인 생활실태와 관련된 지원정책의 현황, 외국의 사례분석 등을 역량개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각종 정책의 방향 등을 검토하였다.

4) 이 부분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연구 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2) 장애아동·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정책

(1) 장애아동·청소년 실태⁵⁾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는 장애인실태조사가 2008년도에 실시되었다.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는 2,137,226명⁶⁾을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되었는데, 여기서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 62,238명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실태와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청소년을 초등학교(만 9세-만 12세), 중학교(만 13세-만 15세), 고등학교(만 16세-만 18세)로 구분⁷⁾하여 각 학교 단위별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별 장애아동·청소년 현황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별 현황은 남자가 67.7%, 여자는 32.3%로 남자 장애아동·청소년이 여자 장애아동·청소년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남자 장애아동이 약 3배 정도 많았다.

② 장애의 유형

장애아동·청소년의 주된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폐성장애(11.0%), 뇌병변장애(8.8%), 지체장애(7.8%)의 순이다. 이를 초·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지적장애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과 중학생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자폐성장애가, 고등학생 장애

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아동·청소년의 실태는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것임.

6)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대상 모집단으로 2008년도 3월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를 뜻하는 것임.

7) 장애아동·청소년 수는 만 9세-만 12세는 23,514명, 만 13세-만 15세는 20,711명, 만 16세-만 18세는 18,012명임.

청소년은 지체장애가 많다.

③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79.6%, ‘혼자서 한다’는 경우는 20.4%였다. 이를 초·중·고등학생 장애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생(92%), 중학생(75.9%), 고등학생(67.8%)의 순으로 도움 필요정도가 높았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부모(85.8%)였다.

④ 보육 및 교육

장애아동·청소년들이 현재 받고 있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음악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심리·행동치료 등으로 구분하여 각 치료서비스의 이용여부, 주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서비스비용, 만족도 등을 알아보았다⁸⁾.

재활치료서비스 중 음악치료의 경우 전체 장애아동·청소년의 23.5%가 이용하고 있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29.2%가, 중학생은 27.2%가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6.1%만이 음악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음악치료서비스 이용정도가 높았다.

미술치료의 경우는 전체 장애아동·청소년의 25.4%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초등학생(31.0%), 중학생(23.0%), 고등학생(18.9%)의 순으로 이용정도가 높았다. 언어치료의 경우는 전체 장애아동·청소년의 28.3%가 이용하고 있었는데, 초등학생의 이용정도가 42.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생(23.6%), 고등학생(9.2%)의 순이었다. 물리치료의 경우는 전체 장애아동·청소년의 11.1%가 이용하고 있었고, 초등학생(17.4%), 중학생(7.7%), 고등학생(4.9%)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서비스의 경우는 전체 장애아동·청소년의 20.6%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초등학생(24.5%), 중학생(19.7%), 고등학생

8) 실태조사 수행시 보육·교육 분야의 조사대상은 만 17세 이하로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9세 이하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만 17세 이하의 장애아동·청소년이 분석대상이 됨.

(14.7%)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놀이치료서비스의 경우는 전체 장애아동·청소년의 19.6%가 이용하고 있었고, 초등학교(24.0%), 중학교(16.7%), 고등학교(15.9%)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심리행동치료서비스의 경우는 전체 장애아동·청소년의 11.4%가 이용하고 있었고, 초등학교(15.4%), 중학교(10.6%), 고등학교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이외 기타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아동·청소년의 23.8%가 이용하고 있었는데, 중학생(27.9%), 고등학생(22.4%), 초등학생(20.9%) 장애아동·청소년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이상의 각 재활치료서비스 이용 결과들을 비교해 볼 때, 언어치료(28.3%), 미술치료(25.4%), 기타치료(23.8%), 음악치료(23.5%), 작업치료(20.6%), 놀이치료(19.6%), 행동치료(11.4%), 물리치료(11.1%)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학교유형별로 볼 때는 전반적인 재활치료서비스에 있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아동·청소년의 순으로 이용정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사회 및 여가활동

장애아동·청소년들이 혼자 외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59.4%가 혼자 외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혼자 외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은 50.4%, 중학생은 64.0%, 고등학생은 65.9%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였다.

⑥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장애아동·청소년들은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 71.6%가 만족해하고 있었고, 특히 고등학생 장애청소년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78.2%)가 가장 높았다. 장애아동·청소년들은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31.9%가 만족해하고 있었고, 43.5%는 불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생 장애청소년들의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정도가 가장 높았다.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33.4%의 장애아동·청소년들이 만족해하고 있었고, 37.9%가 불만족해하고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 장애아동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가장 높았다.

장애아동·청소년들의 경우 가족들로부터 장애인이란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9.5%의 장애인이 ‘자주 내지 가끔 있다’고 하였다. 특히 중학생 장애청소년의 차별·폭력경험 정도가 26.2%로 가장 높았다. 가정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 60.5%로 가장 많았고, 폭력의 주가해자는 부모였다.

⑦ 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과 요구사항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본인이 이용한 복지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이용 경험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장애아동·청소년들은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실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장애아동·청소년들은 본인의 무상·의무교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7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아동수당 지급(25.4%), 활동보조서비스(8.9%),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6.4%)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 본인의 무상·의무교육실시의 경우 중학생 장애청소년이 82.4%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최근 자립생활 이념에 근거해 활성화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는 초등학교 장애아동들의 이용률이 11.7%로 전체 평균이용률인 8.9%보다 훨씬 높았다.

장애아동·청소년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보육·교육 보장’(40.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보장’(12.3%), ‘소득보장’(11.2%), ‘장애인 인권보장’(10.3%)의 순으로 많았다. ‘보육·교육보장’의 경우는 전 연령대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서 가장 높은 요구사항이었는데, 이 외에 초등학교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중학생 장애청소년의 경우는 ‘의료보장’을, 그리고 고등학교 장애청소년의 경우는 ‘소득보장’을 희망하고 있어, 장애아동·청소년의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①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현황

㉠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의 중요성

아동·청소년 시기는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을 의미하지만 영유아 시기인 6세 미만을 제외하면 주로 6세-18세 미만의 초, 중등 학령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기는 다양한 발달과제들과 상관된 능력 발달 측면과 극적인 생리 변화와 함께 겪게 되는 새로운 자아 정체감 형성의 과제가 중첩되어있다.

장애아동·청소년이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일반 환경에 통합되어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업, 행동, 사회 적응 영역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즉,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수교육 서비스는 장애아동·청소년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맞추어 고안된 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교육적 요구는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일반교육과 구분되는 특수교육의 방법은 개별화교육, 치료교육, 순회교육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밖에 직업훈련, 심리상담, 재활 훈련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의 하나는 특수교육의 기본 단위가 개인이라는 점인데, 장애아동 각각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통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장애의 특성을 알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필요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교육 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에서부터 시설에 수용하는 가장 제한이 큰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치 형태가 하나의 연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아동·청소년들은 주로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 병원, 시설, 학교 등으로 파견되는 순회교사를 통하여 교육 및 지원을 받기도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러한 환경 및 상황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아동·청소년의 독특한 요구들과 이를 위한 지원 체계의 현황을 조명해보면서, 앞으로의 이상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장애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지원을 위한 새로운 법 제도의 실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교육 현장에 보다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교육 및 서비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장애아동·청소년의 법적 규정과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2007.4. 개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중 하나가 장애이며, 또 하나는 생활의 제약이다. 즉,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 개인의 신체적 손상은 생활에서 제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와 비교하여 장애를 가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다. 이러한 특수교육법은 전반적인 장애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명칭이 2007년

5월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제정되었다.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특수교육을 다루었던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기타 장애의 총 9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특수교육법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총 11가지 유형의 장애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장애의 범주도 정해 놓아서 특수교육은 소수의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교육적 지원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 위험아동(at-risk children)은 현재 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지 않지만 앞으로 장애를 보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적인 조건에 노출됨으로써 발달상의 문제를 보이게 될 수도 있어서 장애 위험 아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 위험 아동은 일반학급에서 학습, 사회성, 성장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들,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잘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학생들을 포함한다.

② 역량개발 관점에서 본 장애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 학습역량지원

현행 특수교육에 대한 법령의 정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특수교육담당교원 및 교육 전문직인사관리기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㉔ 직업역량지원

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경제적인 소득 보장이 얼마나 이뤄지는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애학생에게 개별적인 특수한 요구에 맞는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립적인 성인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면, 장애청소년의 진로교육을 통한 직업역량의 개발은 학생의 졸업 후 고용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으로 교육과정들은 장애학생이 학령기동안 받아온 직업 및 진로교육의 성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46.4%이며, 미진학·미취업 졸업생의 비율도 전체 졸업생 중 29.2%로 나타나 교육현장에서 사회로 전이하는 단계에서 탈락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반고용현황에서도 전국민의 고용률(15-64세)은 63.7%에 이르는 반면, 등록장애인은 43.8%에 불과(50%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입직단계의 과정으로서의 장애아동·청소년의 현재 직업역량지원정책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아동·청소년 연령층 보다 학교 졸업을 가까이에 두고, 성인기의 다양한 미래 환경과 역할이 요구되는 기술들을 교수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는 중등 특수교육 시기의 직업교육 및 훈련의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3) 장애아동·청소년 역량개발 관련 외국 사례

(1) 미국

미국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주요 법률로는 미국 장애인의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장애인법과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에 관한 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직업재활법(Rehabilitation Act), 재활보조기구법(Assistive Technology Act) 등이 있으며, 이 중 1990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기본 법률에 의해 주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은 각 주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하거나 또는 연방정부의 자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2) 영국

영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고 직업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방향 하에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수당 등 각종 급여체계를 운영하며, 각 지방정부는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재가서비스 및 주간보호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Potter, 2007).

장애정책과 관련된 영국의 주요 법률에는 장애인고용법, 국가부조법,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보호법, 장애인차별법 등이 있다. 소득보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970년 이전까지는 전쟁이나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전부였으나, 1975년 일반인에 대한 장기소득대체 급여로 국가보험기여금 납부 기록에 따라 지급하는 폐질급여(Invalidity Benefit)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하여 무기여

급여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현재에는 법정 질병 수당, 무능력급여, 중증장애수당, 장애근로수당, 장애생계수당, 환자보호수당 등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장애수당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개인 신변처리 또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 보조금으로 개인의 재산상태,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장애정도에 따라 최고등급(주당 약 12만원), 중간급(주당 약 8만원), 최하등급(주당 약 3만 2천원)으로 나눠 받게 된다.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을 위한 보호자 수당은 16세 이상으로 일주일 35시간 이상 장애인을 돌볼 경우 받는 수당이다.

교육지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실정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편이지만 이곳도 중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교육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선 시설 및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 대부분 이곳에서 필요한 교육, 치료, 위미활동 등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장애인의 취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법률화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을 최소화시켰다.

(3) 호주

호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ies), 불리(handicaps) 등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법률상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 Act, 1986)상에는 장애인을 지능, 정신감각, 신체적 손상 등으로 의사소통, 학습, 이동 등에 지장이 있는 자를 지칭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에서는 장애의 정의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신체적, 지적, 심리적, 정신적, 감각적, 신경적 장애와 추형, 기형 및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체의 존재 등을 모두 포함하며 현재 뿐 아니라 과거에 존재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미래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가진 것으로 인지되는 장애도 포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

주에서 장애 정의나 범주를 결정할 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범주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장애학생의 내실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들을 판별하기 위해서 학생의 담당교사와 특수교사, 관리교사, 부모, 학생 그 외 관련전문가와 같은 관계자들이 모여 장애의 수준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호주에서는 장애의 수준을 제 1단계부터 제 6단계로 구분하는데 6단계로 분류되는 중복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대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별적 교육계획안과 대안적 교육과정을 준비하며 필요할 경우 통합이나 분리교육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 수준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충서비스와 보조 장비, 대안적 교수전략과 교육과정 수정은 학생이 가능한 한 빨리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을 특별한 보호와 관심만으로 혜택을 얻는 학생, 부가적인 교육자료 및 개별 자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 중재가 아닌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구분할 때 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부가적인 교육자료 및 개별자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구분된다.

지적 및 중복장애와 중복장애학생의 경우에 교사는 일반교육과정과는 많이 다른 학습경험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특수학교의 경우 장애학생에게 일반학교의 프로그램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고도의 전문화된 개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요 학습영역과 능력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발달 수준과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개인별 요구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짜고 반드시 개별화 교육계획 문서에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특수교사와 보조교사, 치료사, 간호사, 전문교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협력하여 수업을 지도한다.

1991년 연방정부와 모든 주정부 그리고 특별행정구역정부는 연방과 주정부의 장애협정(CSDA)에 조인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고용 및 소득보장이 국가책임이라는 인식하에 고용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해왔던 주거서비스 및 기타 다

른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다. 협정의 일부로서 주정부는 장애인서비스법을 보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의 원칙과 목적을 구체화시켰다.

협정의 결과 자금지원장치에 있어서 행정의 중복 및 복잡성이 감소되었으며, 여기에서 절약된 돈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투자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원조 형태에 있어서 차별이 극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협정 하에 옹호서비스의 계획과 자금 지원에 대한 책임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게 되었다(김형식 역, 1997).

4) 장애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

(1)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① 가족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의 중요성 때문에 주요 OECD 국가들은 모두 부모, 더 나아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활동은 부모교육 외에 가족에 대해 별다른 지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족상담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족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중재는 장애아동 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나 가족에 대한 교육적 지원 또한 강조된다는 점에서 개별화 가족 지원 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교사 및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IFSP의 개발 및 실행에 직간접적 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육, 상담,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문적 지원 팀을 비롯한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

가족구성원끼리 서로 지지하지 못하고 한 구성원이 고립되며,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방어적이고 부정적이며 상호간의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 아동은

정서 및 행동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족치료가 필요하다. 가족 치료의 목표는 가족 상호간의 긍정적인 재강화를 촉진시키고, 문제발생 시에 서로 간에 건설적으로 타협하도록 도와주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② 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실시하여 가정에서 장애아동·청소년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고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이 심각한 학습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시키고, 부모가 아동의 능력 수준을 넘는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고 아동과 부모의 갈등 관계를 해소시키도록 한다(장선철, 2007). 효과적인 부모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은 아동·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효과적인 중재 방법에 대해 부모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모가 학습장애 아동의 정신적인 조력자 및 후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 정책

장애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주위의 교사, 부모, 교육기관, 지역사회, 국가 등이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원 제공을 위한 거시적, 미시적 수준에서의 국가와 별도로 지역사회 지원 모형과 지원 체계 확립에 대한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들은 일반청소년 들에 비해 당뇨, 고혈압, 심장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

해서 예방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장애 자체와 장애로 인한 합병증 등을 고려할 때 장애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건강검진이나 치료,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학교 차원에서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청소년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의학지원, 생활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상담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장애아동·청소년이 누적된 실패 경험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교사 및 또래와의 부정적인 관계 형성을 막기 위해서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외면과 무시를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담은 장애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에 도움을 제공해주는 정신적 후원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장애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해행위나 자살 기도의 경험도 높다. 신체적 자아에 비해 매우 민감한 청소년기에 장애로 인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학교자체의 프로그램 속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행동에 스스로 방치하지 않도록 상담 프로그램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심리상담 뿐만 아니라 학습상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데, 장애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전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최근 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인을 위한 취업기회 제공, 관련 정책 모색, 자립을 도모하는 직업교육을 강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 직업훈련, 취업 연계 체제를 통한 전환계획 모형 개발 연구, 직업평가, 직업교육, 취업알성 및 추수지도, 그리고 직업교사를 위한 연수 강화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장애학생들이 학교 졸업 이후의 성인생활을 위한 고용, 진학 등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취업분야도 주로 침구업, 안마업, 양재업, 원예업, 인쇄업 등 대부분이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의 업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장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을 갖지 못하고 다시 가정이나 시설로 돌아가 의존적이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지적능력과 적응기술에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학생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령기 초부터 졸업이후까지 장애학생의 직업교육훈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수준의 전환교육모형개발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 및 지도 자료를 국립특수교육원과 같은 국가수준의 연구기관에서 개발, 보급해야 한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의 행, 재정적인 정책 입안 및 실행은 추진과정의 파급효과와 강력한 실천력이 수반된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궁극적인 특수교육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환교육도 이러한 맥락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장애학생의 직업평가,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성 및 추수지도에 대한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에서 업무의 조정 및 역할과 책임을 다루기 위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장애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관련부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정책국에서는 장애인의 복

지, 재활, 그리고 소득보장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산하 보육정책관실에서는 장애영유아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아동·청소년 복지정책관실에서는 ‘특별지원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데 여기에 장애청소년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장애청소년 중심의 접근이다. 그 동안 장애아동·청소년의 복지정책은 주요 정책 수혜자인 청소년의 복지요구에 기초하지 않고 주로 정책 담당자나 성인들에 의해 계획되고 시행되어 왔다. 일반아동 및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청소년복지 또한 장애청소년 인권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정책과 서비스는 장애청소년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 추진방안⁹⁾

1)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정상적인 교육의 의미와 내용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개발의 교육과정은 점차 학생들이 성장하여 사회인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시대에 와서는 교육의 개념 정의를 ‘사회화(socialization)’라고 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제 시대가 변해 교육의 이념을 ‘홍익인간(弘益人間)’을 형성하는 것에서 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으로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학교라는 공교육제도가 도입된 것도 산업혁명 당시 경제·사회적 필요에 의한 역량개발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예나 지금이나 크게 교육에 있어 달라진 것은 없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는 우리의 교육이 이와 같은 개개인 학생들의 역량을 제대로 개발시켜주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세계에서 유래 없는 고착된 학벌사회는 개개인 학생들의 모든 역량이 서열화된 대학에의 입학에 따라 영구히 결정된다. 서열화된 대학이 실제로 서열 순서대로 입학생들의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묻지 않더라도 일등부터 꼴찌까지 줄서서 있는 대학에의 입학이 곧 학생들의 역량을 말해주고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는 사회가 우리사회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과 다른 자신만의 역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알 필요도 없이 오직 대학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거나, 국가의 단 한번 수능능력시험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합격증을 자신들의 ‘역량증서’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정상적 학교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대안학교라는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뿐이 없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어 이제 대안

9) 이 부분은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연구 보고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새로운 역량개발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말해질 수 있다.

2009년 8월 현재 대한민국의 총 초·중·고 재학생 수는 8,202,037명에 달하고, 학교중도탈락자는 73,493명으로 약 0.9%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중도탈락 학생의 14%정도가 복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현재 통계에 따르면 인가 대안학교 학생 수가 3,404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나타나 있어 복교생 숫자를 감하더라도 60,000명이 넘는 중도탈락 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안학교는 중도탈락 학생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은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진학이고, 또 하나는 취업이다.

2007년 발행된 「대안교육백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에서 대학진학률은 85%이고 취업은 3%에 불과하며 기타가 12%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대다수의 대안학교는 진학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기존 공교육의 교과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새로운 대안학교의 교육 및 교과 과정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초등학교과정의 대안학교에서 82%가 다시 중학교과정의 대안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 과정의 72%가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것에 나타나 있다. 요약해서 서술하면 85%의 대안학교 학생들은 다시 고등교육과정의 공교육제도로 최종적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대안학교에서 새로운 진학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문제는 취업이나 기타에 소속한 대안학교 소속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학업을 중단했지만 아직 대안학교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은 60,000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실업도 국가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지만 대학의 역할 중에는 청소년실업을 묶어 두는 역할도 있다. 또한, 대학의 고등교육 과정에서 이들이 성숙해지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을 키워 실업자로 졸업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비행에 빠질 염려가 중·고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즉, 대학으로 진학한 대안학교 출신의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은 고등교육 기간 동안 자신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기회를 얻어 그 만큼 취업을 위한 역량을 키울 수 있어 진로가 전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대안학교에서 곧바로 취업을 하거나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부적응 청소년과 대안학교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은 비록 고등교육에는 못 미치지만 대안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아 정상적인 취업을 해서 그들의 일차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비행 및 문제 청소년들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할 때에 즉, 취업을 통한 일정한 수입이 없을 때에 생존을 위해 범죄에 가담할 수뿐이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대안학교가 아무 소속도 없고, 갈 데가 없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직업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많은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게 정상적인 진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안학교는 더 나아가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제도는 전문계고(구, 실업계고), 마이스터(Meister)고를 들 수 있다. 2010년 3월부터 개교하게 될 21개의 마이스터고는 엘리트 전문계고로 볼 때에 전체적으로 마이스터고 제도로 경쟁이 가열된 전문계고 체제라 할 수 있다. 마이스터고의 출현으로 인한 직업훈련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에서도 향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제도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대안을 찾는 학생들의 숫자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자연감소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경쟁체제로 인한 중도탈락의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에 대한 대안적 직업훈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이 자본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의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는 곧 교육의 격차로, 취업의 격차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회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거나 불안정한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이미

고착될 대로 되어버린 우리의 공교육체제에서는 대학교평준화와 같은 혁명적 교육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육에 있어서의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서 위탁형 대안학교 중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의 가능성은 개연으로서가 아니라 필연으로서 주어져야 한다. 이는 교육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나 지자체 그리고 청소년관련 부처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할 책무이다. 한국의 많은 초·중·고 학생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제도를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제도적 진로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제도권 밖에서 학업을 중단한 채로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가 문제이다. 특히, 청소년기관에서 위탁받고 있는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이 포기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안학교들 중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목표로 하고 수업료도 비싼 귀족 대안학교가 있는가 하면, 청소년기관에서 위탁받아 정부 교육기관에서 관심 없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데리고 힘겹게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들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학교들은 비록 재정적으로나, 교과과정, 학교운영, 학생선발, 교사수급, 학부모와의 교육적 관계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교육에서 소외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진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역량을 개발해 준다면 이는 교육에 있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복지적 차원에 있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2)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현황 조사 분석

(1) 면접 결과분석

① 면접결과 분석내용

15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담당자와 면접을 진행하여 대안학교의 현실정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대안학교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몇 가지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안학교의 철학과 미션의 경우, “대안학교” 자체에 대한 정체성의 고민이 필요하다. 즉 지난 10년 동안 대안학교가 발전된 이후 앞으로의 10년을 대비해야 되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 중심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인정, 실질적인 지원,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시설과의 관계에서 청소년 시설에 있는 대안학교의 경우 청소년 시설에서의 자율성(독립성)과 자원 등의 활용성에서의 적절한 긴장과 협력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몇몇 대안학교 들은 새로운 조직형태나 새로운 관계형성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시설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운영된 경우, 운영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넷째, 대안학교 운영의 측면 역시 재정적인 부분은 대안학교 운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재정은 기본적으로 수업료, 교육청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후원, 기금사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시도가 많았다. 따라서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은 주된 고려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안학교 주체의 차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관계에서 볼 때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조사대상의 대부분의 대안학교에서는 외형적으로 긍

정적인 관계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대체적인 학부모의 무관심과 가족문제 등은 대안학교가 학교의 기능만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대안학교 학생의 가족의 기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 교육의 차원에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교과와 특성화교과의 양대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안학교에서 담당 교사들이 특성화 교과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대안학교의 경우 특성화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② 시사점과 제언

대안학교 면접분석결과에서 파악되는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대안학교를 볼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안학교는 끊임없이 변하고 변화하려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비록 공교육과 그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는 대안학교와 기존 공교육에서의 일반학교를 구분해주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한 제언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서울과 지방에서 지방의 대안학교에 대한 상대적 지원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학교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볼 때 제한적이지만 조사대상 기관 중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대안학교가 지방의 대안학교보다 자원 및 경험의 측면에서 양적 및 질적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각지에서 대안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때 지역차원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도시에서 진행되는 도시형 대안학교 외에 지방에서는 통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숙형 대안학교의 모델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전주지역 같은 지방에서는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처럼 지역 대안학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심역할을 하면서 대안학교를 지원해주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둘째, 청소년 시설과 대안학교의 자율과 협력적 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청

소년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경우 장점으로 지닌 자원 활용, 공간 확보,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시설 별로 볼 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쉼터, 정보통신학교(구 소년원) 등의 형태에서 대안학교 운영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쉼터의 경우 대안학교 모델과 운영이 적절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보통신학교의 경우 아직 출발단계라서 발전전망을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정보통신학교에서 대안학교는 기존의 다른 조사대상 대안학교와는 다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법무부 산하, 5일 수업의 단기적 운영, 대안학교 운영목표와 설립이념의 차별성 등). 정책적 차원에서 정보통신학교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의 모델과 발전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3) 외국의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량개발 사례

(1) 독일의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량개발 사례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명시되었듯이 높은 실업률에 직면한 독일 청소년들의 직업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청소년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지원을 통하여 무엇보다 실업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정부와 함께 대책들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모델로서 독일의 「연방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는 실험적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세계로의 통합을 위한 한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서의 “노동세계 관련 청소년사회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법적 토대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3조이다. 이 조항에서는 특별히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대책들이나 프로그램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교육에의 청소년지원

대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내용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들은 청소년들에게 노동시장과 관련된 역량개발과 고용을 새롭게 연결해주는 예방적 대책과 여성청소년들과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취업지원, 동서독 청소년들의 통합, 청소년교류, 네트워크 확대 등의 대책들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최우선 목표는 어떻게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그들의 삶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얻어내는 데 있다. 즉, 독일 정부는 청소년들 중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적의 교육과 직업훈련 및 일자리가 주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에 대한 방법적 인식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 얻어진 인식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참여자들의 새로운 협력과 협력관계의 질에 대한 요구이다. 즉, 노동세계와 관련된 청소년사회사업은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청소년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안들 사이의 조정의 어려움을 혼자서 하거나 또는 이론으로만 해결하려하면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세계와 관련된 청소년사회사업은 결국 여러 차원에서 중개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얻어진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질이 노동시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사회사업은 이러한 부서 청소년들의 직업적, 사회적 통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규 교육과정정보다는 청소년사회사업이 보다 비제도적이고 비형식적이라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삶의 환경과 출구상황에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사회사업 한 사례는 독일 지방 농촌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베저-엠스(Weser-Ems) 지역에서 1989-1992년에 수행되었던 모델 프로젝트이다.¹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학교부적응 청

10) Christe, G.(1999). Perspektiven benachteiligter Jugendlicher jenseits des regulären Arbeitsmarktes und traditioneller Berufsorientierung. Fähigkeiten und Kompetenzen für Alltagsbewältigung. 참조, in Evangelische Akademie(1999). Jugendberufshilfe im Dilemma.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pp. 129~137.

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역량강화와 고용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100여명이 참가하고 10개의 부분 프로젝트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특별한 점은 바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즉, 서로 다른 학업적, 직업적 전제조건들을 가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특별히 의미 있는 고용의 장(field)과 미래의 노동수요에 맞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건축, 재생 폐품 재활용, 자연보호와 환경미화 등에의 역량개발이다.

(2) 영국의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¹¹⁾

영국정부는 1970년대 중반의 청소년 노동시장의 불균형에 대하여 1975년부터 직접 개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개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재활보조금(RSSL¹²⁾) 지급, 청소년고용 보조금(YES¹³⁾), 근로체험 프로그램(WEP¹⁴⁾),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¹⁵⁾)들이다. 영국 정부가 조기에 청소년 실업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실업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회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청소년실업 문제의 해결의 비용이 치료비용보다 적게 지불되기 때문인 것이다.

영국정부의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재활보조금(RSSL) 지급, 청소년고용 보조금(YES) 제도, 근로체험 프로그램(WEP),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과 같은 일련의 노력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성과를 얻게 된 것으로 증명되었다. 처음 시도한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재활보조금

11) Deakin, B. M.(1996). The youth labour market in Britain: the role intervention. Cambridge: the Univ. of the Cambridge Press 참조

12) Recruitment Subsidy for School Leavers

13) Youth Employment Subsidy

14) Work Experience Programme

15) Youth Opportunities Programme

(RSSL) 지급 제도와 청소년고용 보조금(YES) 제도는 크게 고용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계속적인 노력으로 수행된 근로체험 프로그램(WEP)에서부터는 프로그램의 종료 시 참가 청소년의 61%가 완전고용의 일자리를 얻게 되는 성과를 낳았다. 이어서 실시한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에서는 16~17세의 많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취업이 되었고 참가자의 60%가 취업이 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고용주에게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재활보조금(RSSL) 지급 제도가 1976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을 때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수가 29,000명에 불과했으나, 1978년에 시작해 1983년 청소년 기회 프로그램(YOP)이 종료될 시 누적 참가자는 1,834,700명이나 되었다.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대다수이다. 학교가 싫어 학교를 뛰쳐나온 이들에게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학능력고사를 준비하는 교과과정보다는 이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이 보다 유효하고, 필요하다. 이들에게 독일의 기업과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모델 프로그램이나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업에 일정 보조금을 주어 이들이 직업훈련을 받게 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이들이 사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4)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의 방향과 전략

(1) 역량개발 정책의 방향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겠다. 하나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역량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 취업을 목적으로 인턴십 등의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이다.

① 상급학교로의 진학 및 학교복귀를 위한 역량개발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대다수의 대안학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이다. 많은 수의 대안학교들이 이렇게 진학으로의 방향을 설정한 것과 달리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진학으로부터의 갈등과 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달리 말하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이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진학으로의 동기부여가 매우 낮기도 하고, 교사인력 등을 볼 때에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대안학교의 목표로 설정할 여건과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가 제도권 학교나 학원과 진학을 위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도 가능성도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이 진학을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직접 대학진학이나 기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제도권 학교나 학원과 같은 형태의 교과과정이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공통 주요 교과목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향후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학교복귀를 원하는 경우를 대비하거나, 교양적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실제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를 찾아온 학생들은 처음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학교복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없지만 차차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면서 마음을 정돈하여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학교복귀를 준비하는 과정과 내용을 담아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②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

제도권 학교를 다니거나 특성화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력이 인정되고, 또 이들은 진학을 목표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수학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아 졸업하게 되면 직업을 얻

는다. 이들에게는 시간이 문제지 직업을 얻는 데 있어서는 대안학교 학생들이 보다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고, 직업능력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안학교에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교육세를 받고 있으면서 국가의 책무 대상인 이들을 유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대하는 지원정책도 학부모들의 발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책무는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고만 치지 않도록 묶어두는 의미정도로만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 이제 정부도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대안은 다름 아닌 바로 직업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각도의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역량개발 정책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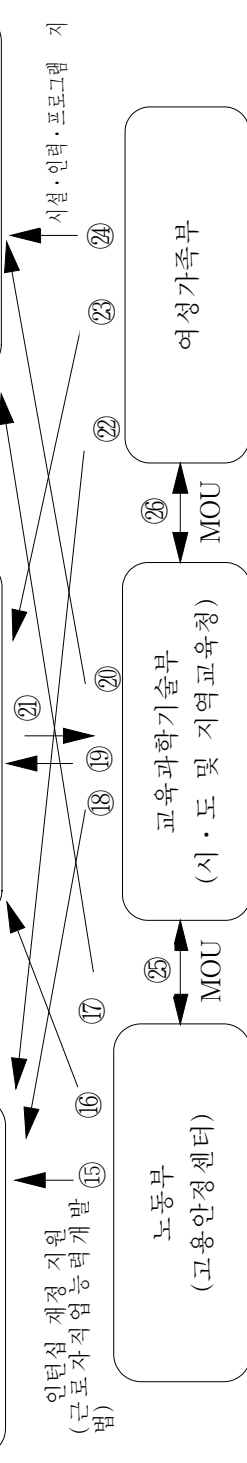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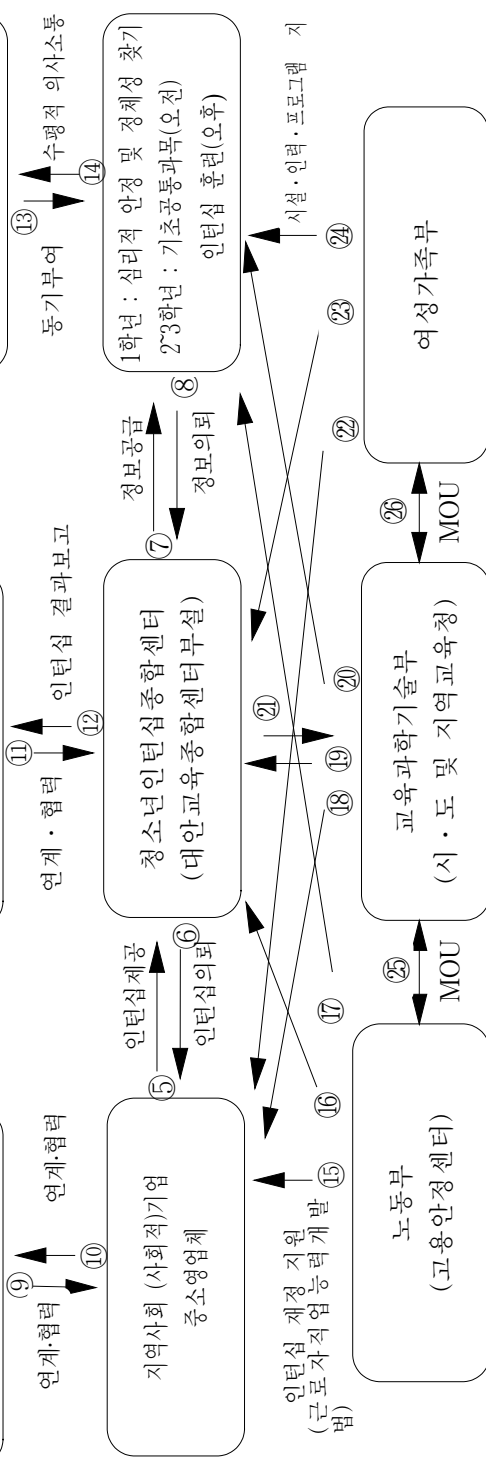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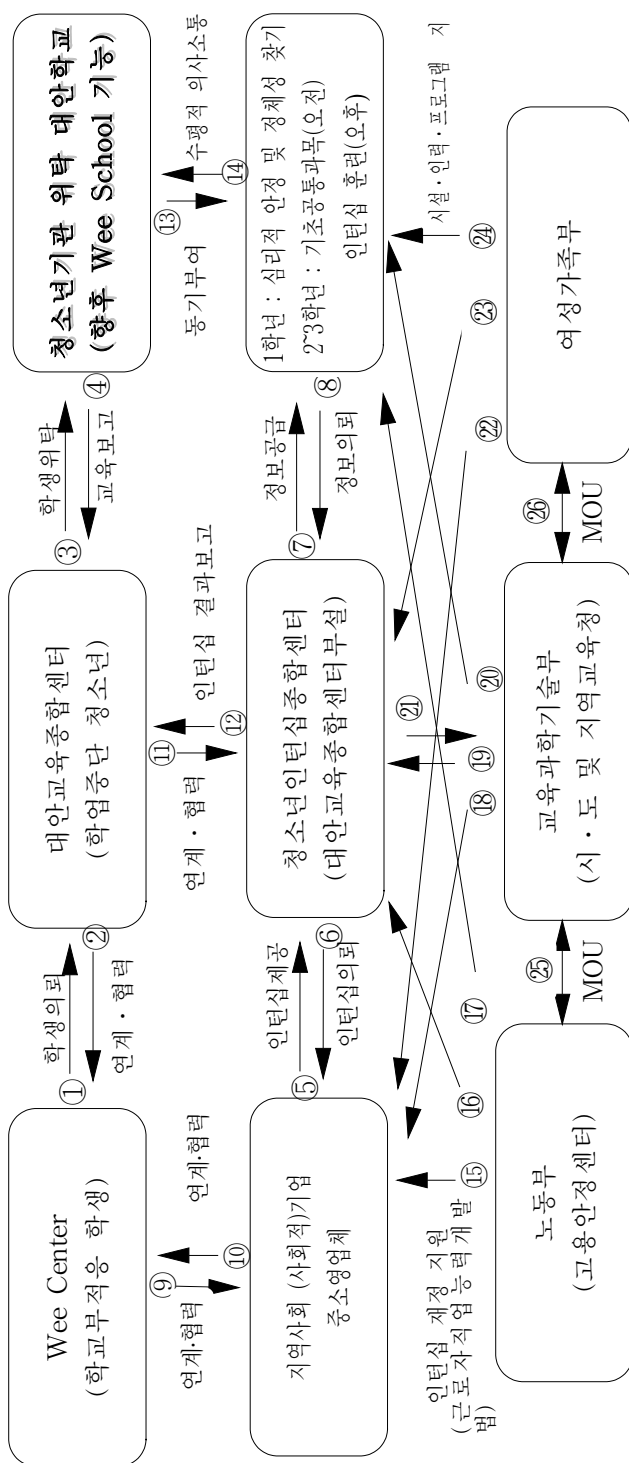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역량개발 정책방향이 주요 공통 교과목 수업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및 학교복귀와 직업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으로 설정되었다면 이제 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책적 전략의 문제이고 기획의 문제이다.

전략적 기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각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정책방향에 대하여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대안학교의 운영에 관한 정책방향을 진학 및 학교복귀에 둘 것인지 아니면, 직업능력의 개발에 둘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자택일의 정책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 측의 기대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기획으로서의 정책방향 선택은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

다.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의 내용은 수요자 측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방향은 비록 직업능력의 개발로 맞추어져 있지만, 상급학교로의 진학의 길은 항상 열어 놓고 이를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을 수 있으나 이들에게 공통된 사항들이 어떠한 것들이냐가 중요하다. 이는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실천 가능성과 효과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제이기도 하고, 정책의 전략 요소이기도 하다. 이들을 열거하자면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인식과 의지,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교사의 양적 및 질적 확보,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단체의 참여 및 지원,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진학 가능한 학력인정, 직업역량개발 전문가 인력풀(pool),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센터 개설 및 운영,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유도, 위센터(Wee center)와 연계 직업훈련 위스쿨(Wee school) 대안학교로의 전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서술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과 실태조사의 결과 및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종합해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 방안을 하나의 모형으로 제시하자면 아래의 [그림 III-1]과 같다.

[illegible]

⑩ 재정지원 (17) 인턴십훈련 참여학생 (18) 협력업체 선정 (19) 운영·인력지원 (20) 교육비지원 (21) 연계·협력 (22) 연계·협력

4. 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 방안¹⁶⁾

1) 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과 능동적 복지정책

청소년의 생애역량 개발에 대한 논의에서 잊혀진 존재로 남아 있는 청소년 집단 중 하나는 소위 범죄청소년이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들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 범죄청소년을 미래의 사회적 자원으로서 간주하기 보다는 골칫거리나 사회적 부담으로 여기고 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 등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들을 배제시키는 경향까지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이 사회의 부담이 되고 그들에게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커진다. 여기에 범죄청소년을 위한 역량 개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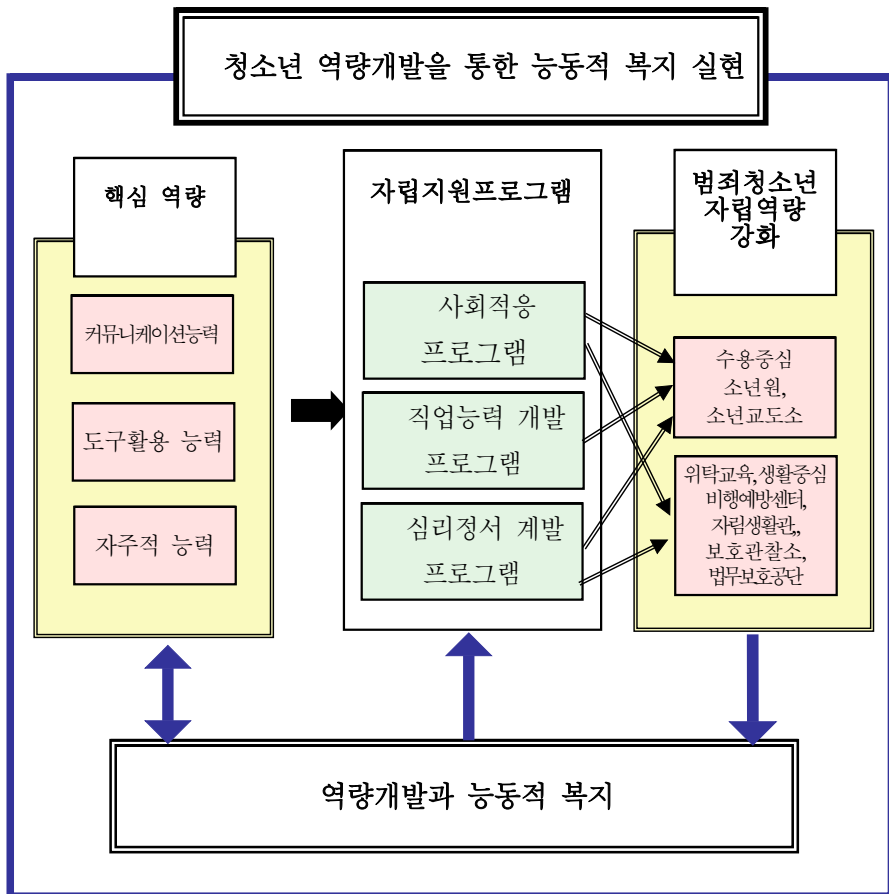
범죄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능동적 복지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우선 분석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한다. 첫째, “역량개발”은 개인적 차원에서 고찰되어야하며, 또한 “능동적 복지”는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것이다. 여기서 위의 개인적 역량 개발과 제도적 (능동적)복지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개념으로서 본 연구는 “자립지원”의 개념을 상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역량이란 ‘조직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직무의 핵심적 성공요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도구활용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능동적 복지의 핵심취지가 ‘복지는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지원(소비)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적극적 투자(생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에서 연구의 주된 관심도 출되는 바, 범죄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가장 능동적인 복지정책은 그들이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고 시설수용이나 보호관찰 등을 이수한 후 규범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립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16) 이 부분은 “비행청소년 자립지원정책 방안”연구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있다.

능동적 복지와 핵심역량의 개념은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인 범죄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능동적 복지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하는가?하는 문제제기에 대한 이론적 출발점을 제공한다. 즉 개인적 차원의 “역량개발”을 “능동적” 복지정책과 관련을 시킨다면, 범죄청소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립지원”정책이 가장 적극적 의미의 능동적 복지정책이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III-2]와 같다.



[그림 III-2] 비행청소년의 자립역량 개발과 능동적 복지의 관계

위 모형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세가지 역량, 즉 사회적 상

호작용능력, 자율적 문제해결능력, 도구활용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토대로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종료 또는 퇴소 후 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적 자립(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회구성원으로써 원활한 경제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심리·정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핵심역량과 교육프로그램 유형의 관계는 분석적 측면에서 가능할 뿐, 실제 교육의 목적이거나 내용, 또는 교육을 통한 기대효과 및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구분과 연결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핵심역량 유형과 교육프로그램 유형의 관계성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분류는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이 구분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유일한 잣대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다.

여기서는 범죄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현장전문가 조사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분석 및 대상청소년의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토대로,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과 자립지원시설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및 자립지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관별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 현황 조사는 법무부 소년과와 보호관찰과,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2009년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등 총 43개소이며, 여기서는 개

별 기관별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정리하였다.

(1) 소년원

①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적응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은 학력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법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직업 탐방 프로그램 등이다.

소년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 영역에 비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실제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소년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어려운 점으로서는 범죄 청소년의 참여 동기 부족, 교육인프라 및 예산이 부족, 범죄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프로그램의 부족 및 교육 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소년원의 특성상 외부 활동에 대한 부담감, 교육 업무 이외의 행정업무 과다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범죄 청소년의 자립 향상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것에 대한 제안으로는, 가정 기능의 강화, 소년원 시설의 확충과 쾌적하고 넓은 공간과 호실에 대한 필요성, 교과학습 이외의 다양한 체험활동의 필요성, 다양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의 필요성 등이다.

②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범죄 청소년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회적 자립을 위해 실제적인 역량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으로 제시된 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첫째, 범죄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직업 능력 개발프로그램은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자격화할 수 있는 과정이 많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른 주요성과로는 기술자격 취득으로 직업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성을 높이는 등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범죄 청소년들의 인간 교육이다.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에서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지만 이와 더불어 인간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실적 위주가 아닌 인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주요성과로는 자신감 배양 및 긍정적 사고방식 증진을 통한 재비행 예방,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적성을 파악하고 집단 훈련을 통하여 사회성 및 인간관계 개선 기술을 습득, 하나하나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등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응답하였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범죄 청소년들의 취업에 대한 의지 부족, 힘든 노동에 대한 거부감, 취업 연령의 문제, 교육 장비 및 자재의 부족 그리고 교육담당 직원의 업무과중, 특히 교육보다는 생활지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교육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심리정서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범죄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현 상황과 범죄로 인해 앞으로 삶에 대한 부정적 생각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심리정서 계발 프로그램을 통해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 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으로서는,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한 문제 확인 및 재인식을 위한 프로그램, 예술치료를 통한 정서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자신의 미래

및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순화 및 유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다.

〈표 III-1〉 소년원 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구분	사회적응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심리정서개발 프로그램
목적 및 주요 내용	■ 학력취득(검정고시) ■ 법교육(성,약물 등) ■ 문제예방 ■ 자존감 향상 ■ 직업탐방	■ 실제적인 직업능력개발 (기술 자격증 취득) ■ 인간 교육 실시 (인격적인 삶 지향)	■ 문제확인 및 재인식 ■ 예술치료를 통한 정서안정 ■ 미래 및 진로 탐색 ■ 부모자녀 관계 회복 ■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순화 및 유대강화
주요 성과	■ 상급학교 진학 ■ 법에 대한 긍정적 태도 ■ 약물의 위험성 인지 ■ 문화체험, 봉사정신함양 ■ 성취감, 자신감 회복	■ 자립 의지 향상 ■ 기술자격 취득으로 자신감 회복 ■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 재비행 예방 ■ 성공 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자아 형성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 긍정적 자기표현 향상 ■ 자아존중감 회복 ■ 부모자녀 긍정적 관계 형성 ■ 사회교류 기술 향상
문제점	■ 참여동기 부족 ■ 교육인프라 및 예산 부족 ■ 사회의 부정적 인식 ■ 프로그램 부족 및 교육담당자 역량부족 ■ 외부활동의 부담감 ■ 교육업무 외 행정업무 과다	■ 힘든 노동에 대한 거부감 ■ 취업연령의 문제(미성년자) ■ 교육장비 및 자재 부족 ■ 교육 담당자 업무과중	■ 체계적인 진행 어려움 ■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필요 ■ 부모교육 진행의 어려움
개선 사항	■ 가정 기능의 강화 ■ 시설 및 교육인프라 확충 ■ 다양한 체험활동 ■ 취업 정보제공 ■ 지역사회와 적극적 협력	■ 행정기구의 정비 ■ 산학 협력의 확대 ■ 취업 후 주거의 안정 ■ 창업 자금 지원 ■ 기업이 원하는 인재선발 기회 제공	■ 프로그램 전문인력 확충 ■ 가족관계의 회복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의 연계 기능 강화

심리정서 계발 프로그램은 범죄 청소년의 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의 일관성이나 체계성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교육 담당자들이 제시한 문제점으로서,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진행이 곤란하다는 점, 대상자에게 맞는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 부모교육이 중요하지만 이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부모교육은 소년원의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점 사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범죄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가정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모교육이 1회성 행사 또는 특강 형태로 이루어짐으로써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이나 가정의 기능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2) 대안교육센터

전국의 5개 비행예방센터의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행예방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되는 영역별 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영역별 프로그램의 목적 및 주요내용, 성과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표 III-2>와 같다.

①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비행예방센터에서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체험교육, 대안교육, 심리검사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으로서는, 법교육 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 절도 등 범죄에 대한 인식변화 프로그램, 금연, 금주, 약물예방 및 성문제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

대안교육센터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첫째, 교육생들의 범죄 유형이나 위탁 기간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적용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나 예시 등이 어려워 일반적인 수준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교육생의 수강태도의 비적

극성이다. 대안교육센터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자발적인 교육이 아니므로 건설적으로 참여하거나 시간 채우기 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분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셋째, 교육생의 학습능력 부족이다. 교육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으로 인해 강의내용 이해도가 낮아 강의 자체가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실제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실효성이 적은 교육 진행이다. 대상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많은 경우 1회성으로 그치는 면이 있어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표 III-2〉 대안교육센터 프로그램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구분	사회적응 프로그램	심리정서계발 프로그램
목적 및 주요내용	■ 법교육(법지행의 절차 이해 등) ■ 사회봉사(장애인, 어르신 봉사 등) ■ 절도 및 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 금연, 금주, 약물 및 성문제 예방	■ 비행예방 및 정서순화 ■ 교통안전 교육 강화 ■ 자아발견 및 자존감의 회복
주요성과	■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감소 ■ 타인에 대한 배려 및 더불어 살아가는 중요성 인식 ■ 비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약물의 심각성 인식 및 금연 성공	■ 재 비행 예방 ■ 약물 및 인터넷 중독 개선 ■ 교통 법규에 대한 이해 ■ 자기이해 및 개방, 수용을 통한 자아존중감 상승
문제점	■ 다양한 교육생들로 인한 프로그램 적용 및 운영의 어려움 ■ 교육생의 비적극적인 태도 ■ 교육생의 학습능력 부족	■ 참여가의 비적극적인 태도 ■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문제 ■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과 재충전 시간의 부족
개선사항	■ 교양교육의 내실화 ■ 청소년 봉사활동 운영 확대 ■ 청소년 전문 인력 양성 ■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다양한 장학제도 도입 필요	■ 사회적 인식의 변화 ■ 프로그램 이수 이후 사후지도의 강화 ■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 ■ 위기 청소년 지원 시스템 정비 ■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

대안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도입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는, 교양교육의 내실화, 청소년 봉사활동 운영 개선, 청소년 전문 인력 양성 강화,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다양한 장학제도

의 도입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심리정서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심리정서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비행예방 및 정서순화를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자아의 발견 및 자존감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이들 프로그램의 주요성과로는 자기이해, 개방, 수용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학업 중단 해소,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에 대한 구체적 설계의 시간을 갖게 되는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프로그램 이수 이후 사후지도의 강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 산재해 있는 위기 청소년 지원 시스템을 통합,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 확대 등으로 제안되었다.

(3) 소년보호협회 산하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자립생활관의 프로그램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6개 청소년자립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운영되는 영역별 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표 III-3>.

①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자립생활관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응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및 주요성과에 대해 응답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산업체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요성과로는 인격체로서 주인의

식을 가질 수 있었고 사회생활에 동참한다는 기대감, 적성에 맞는 취업과 진지한 고민을 통한 진로를 결정 등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3〉 소년보호협회산하 자립생활관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구분	사회적응 프로그램	심리정서계발 프로그램
목적 및 주요내용	■ 사회적응 훈련(취업정보, 직장내 예절 교육 등) ■ 문화적 소양 증진 ■ 올바른 경제생활 습득	■ 심리안정 및 자신감 있는 사회복귀 지원 ■ 예술 치료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
주요성과	■ 사회동참에 대한 기대감 ■ 적성에 맞는 취업에 대한 고민 ■ 문화활동에 대한 거부감 감소 ■ 근검절약을 통한 저축의 생활화	■ 자아정체감 회복 ■ 취업과 진학에 대한 의욕 고취 ■ 현재 상황이 인식 및 긍정적 미래상 만들기
문제점	■ 거주 청소년 생활지도의 어려움 ■ 프로그램의 부족 ■ 전문 교사의 부족	■ 대상자의 지속성 부족 ■ 청소년들의 무기력과 의욕저하
개선사항	■ 자립하는 청소년 대한 사후관리 ■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강화 ■ 자립생활관 시설 인프라 개선 ■ 거주 청소년 대한 지원 확대 ■ 청소년 거주 연령에 대한 재검토	■ 예술 공연 관람의 기회 확대 ■ 개인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 거주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성 확보

둘째, 문화적 소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문화적 소양 증진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응력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 거주 청소년의 경우 자립생활관에서의 생활하면서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바, 경제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매우 중요한데 주요 내용으로는 근검절약 교육, 금융기관 직원 초청 저축강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갖기, 월 단위 용돈사용 내역 점검 등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성과로는 자존감 형성 및 용돈 사용방법 습득, 근검절약을 통한 저축의 생활화로 자립기반 구축 등이 나타났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거주 청소년 생활지도의 어려움,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 및 여건 부족, 전문 교사의 부족 등으로 지적된 바, 기관에 정식 직원을 채용하여 상담,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상주시킴으로서 청소년 개인별 체계적인 관리 및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립생활관의 프로그램 담당자가 응답한 개선방안으로는 자립하는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 청소년 (재)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자립생활관 시설의 인프라 개선, 거주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청소년 거주 연령에 대한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② 심리정서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자립생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심리정서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심리안정 및 자신감 있는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거주 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과 시설에서의 생활과 사회생활에서의 조화를 추구하며, 개인적으로 자존감을 향상시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둔다. 주요성파로는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해 내적분노와 자아성장, 자아정체감을 찾도록 돕고 취업과 진학에 의욕을 고취,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자존감과 의욕을 갖도록 함, 현재의 자신을 알고 건강한 자아로 성장하도록 도움, 생활관에서 생활시 정서적 안정 등이 나타났다. 둘째, 예술 치료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미술이라는 시각매체를 통해 스스로 억제, 상실, 왜곡된 부분을 발견하고, 매체를 이용하여 상징성과 전체성을 통합시킴으로써 자신의 문제와 인격을 인지 발전시켜 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내면의 모습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요성파로는 집단 미술치료를 통해 상호작용을 강화 및 생활관 내 학생들 간의 관계 개선,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긍정적 미래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 배양 등이 효과로 나타났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의 심리정서 계발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대상

자의 지속성 부족이다. 퇴소, 입소의 이유로 생활관 거주기간이 짧고 대상자의 변동이 많아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낮다. 또한 흥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무기력과 의욕저하이다. 대부분의 거주 청소년들은 무기력감과 의욕저하로 프로그램에 흥미를 갖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역동성이 적고, 수동적인 경우가 많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의 프로그램 담당자들의 제안하고 있는 개선방안으로는 예술 공연 관람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또한 거주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대상자는 법원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내린 자, 가석방되거나 가퇴원한 자,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 등이 대상이 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선도가 가능한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신,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면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와 민간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일을 맡는다. 세부 사항으로, 보호관찰 실시 및 사회 봉사명령·수강명령 집행, 갱생보호,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자에 대한 선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 지도, 범죄 예방활동, 판결전 조사,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성인 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결과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주었으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워 프로그램의 분류를 통해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운

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정서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상당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다만 실질적인 직업능력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의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회로부터 격리 되지 않고 보호관찰소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문제에 대한 처벌을 대신하는 것임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범죄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거나 올바른 습관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통법규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프로그램, 폭력·절도 예방 프로그램, 복학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며 프로그램의 주요성과로는 학업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경제적 또는 환경적 원인으로 학업을 포기했던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학업성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계발을 통한 자아존재감을 형성하고,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을 학습하고 자신에게 맞는 희망직업을 탐색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 등이다.

② 심리정서 계발 프로그램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심리정서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자아발견 프로그램이며, 주요성과로는 긍정적인 자아상 발견,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숙,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 자아존중감 향상, 사회적응력 향상 등이다. 둘째, 정서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으로서, 주요성과로는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 및 내면의 상태 파악,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 미술치료를 통한 심리적 갈등 해소, 자존감 향상,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등이다. 셋째,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주요성과로는 자연에 대한 소중함 인식, 인내심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기르기, 새로운 문화 체험, 새로운 관심 분야 개척 등이다. 넷째,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주요성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가정폭력의 범죄성 인식, 가족과의 의사소통 향상, 부모역할 훈련을 통해 부모와 비행청소년간 적

절한 관계 형성 등이다.

보호관찰소의 교육 대상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대상자의 소극적 참여, 교육대상자의 범죄 특성에 따른 교육이 안 되는 점과, 그리고 새로운 범죄 유형의 습득 또는 범죄 동조자와의 부정적 관계 설정 등이 어려운 점이다.

보호관찰소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들의 자립 향상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적극성 고양,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초기 진단과 교육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운영되는 영역별 프로그램의 목적 및 주요내용, 성과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보호관찰소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구분	사회적응 프로그램	심리정서계발 프로그램
목적 및 주요내용	■ 교통법규에 관한 교육 ■ 성교육 프로그램 ■ 약물 및 사아비 중독 예방 ■ 폭력 절도 예방 교육 ■ 복학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 자아발견 프로그램 ■ 정서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주요성과	■ 교통사고의 경각심 고취 ■ 각종 성범죄를 예방 ■ 폭력행위의 재발을 방지 ■ 합리적 의사결정 방법을 학습	■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력 향상 ■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 새로운 관심 분야 개척 ■ 가족과의 의사소통 향상
문제점	■ 대상자의 소극적 참여 ■ 범죄 특성에 따른 교육 ■ 범죄 유형의 습득 또는 범죄 동조자와의 관계 설정의 우려	
개선사항	■ 프로그램 참여 적극성 향상 ■ 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 초기 진단과 교육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 ■ 교육 대상자의 태도 변화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	

(5) 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 자립생활관

법무부 보호관찰과 산하의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숙식보호,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따라서 범죄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①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및 주요성과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크게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중 직업훈련, 취업알선, 학업지도 등 분류 자립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첫째,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희망,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이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토록 직업전문학교, 일반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일정한 취업처를 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갯생보호후원회원, 기타 독지가 등과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검정고시준비, 일반학원에 위탁교육, 취업알선, 성교육, 금연교육 등 이다.

둘째, 여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다. 여성부 후원으로 여성출소자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교육, 집단상담치료 등 전문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청소년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셋째,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 기초질서 및 일반금융, 행정관련 처리방법 등을 교육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모성보호교육, 집단상담치료 등이다. 주요성과로는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습득, 준법정신 함양, 사회적 역할 습득 등이다.

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무보호복지공단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프로그램 진행 예산 부족이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위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예산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많고, 전문적인 영역의 프로그램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직원의 전문성과 전문 인력(자원봉사자 등)이 부족하다. 교육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도 부족하여 양질의 교육활동을 전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융통성이 부족하다. 취업한 청소년의 경우 야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는데 예산과 강사(직원, 자원봉사자 등)의 한계가 있다. 넷째, 재사회화 과정의 부족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재사회화) 유도를 위한 시설별 적용프로그램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불필요한 운영경쟁이다. 시설 존치 명분을 높이기 위한 입소자 확보에 대해 경쟁적으로 운영함으로 본질적인 기능에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청소년들의 자립향상과 사회복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첫째, 청소년 개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회 내 처우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등 전문가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유사 기능시설에 대한 통합 및 관리 일원화를 통한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적극 개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인프라 구축 등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첫째, 청소년의 개별 또는 집단별 특성을 감안한 분류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일반 경제적 빈곤 위기청소년과 범죄경력 청소년 및 비행가능성 상존자에 대한 분류 처우가 필요하다. 둘째, 상호 교류를 통한 모방범죄 가능성 억제기능 및 하위문화 형성을 통한 2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체 특성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양성화 및 특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부처별 실적 위주 단순프로그

램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경쟁적 관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위기 청소년 분류별 관리실태 및 문제점 정기점검 기구도 필요하다.

법무보호복지공단 산하의 자립생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주요내용, 성과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표 Ⅲ-5>와 같다.

<표 Ⅲ-5> 법무보호복지공단산하 자립생활관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구분	주요내용
목적 및 주요내용	■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여성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주요성과	■ 사회 진출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 습득 ■ 새로운 분야에 도전, 자신감 배양, 사회적 역할 습득 ■ 준법정신 함양, 사회적 역할 습득
문제점	■ 프로그램 진행 예산 부족 ■ 직원의 전문성과 전문 인력(자원봉사자 등)이 부족 ■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융통성이 부족 ■ 재사회화 과정의 부족 ■ 불필요한 운영경쟁
개선사항	■ 청소년의 개별 또는 집단별 특성을 감안한 분류화 작업 필요 ■ 상호 교류를 통한 모방범죄 가능성 억제 ■ 부처별 실적 위주 단순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 ■ 기 청소년 분류별 관리실태 및 문제점 정기점검 기구

(6) 소년교도소

① 사회적응 프로그램

소년교도소에서 운영되는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주요내용과 성과로서는, 첫째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이의 주요성과로는 기본소양과 지적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 건전한 사고와 인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여 재범방지에 기여 등 이다. 둘째, 방송통신대학교 프로그램 운영이며, 주요성과로는 일반 국민으로서 기본소양함양 및 지능계발, 교육을 통한 출소 후 사회적응력 배양 및 재범방지 등이다. 셋째,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들의 주요성과는 개인별 심리검사를 통하여

개인의 학습성취도 측정을 통한 맞춤형 교육 모색, 다양한 학습능력 향상방안을 제공하여 개인별 학습능률 제고 등이다.

②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소년교도소의 특성상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애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 사육 및 교육을 통한 생명 존중사상 고양하고, 수용자의 안정된 수형생활 및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인별 1년 이상 단위 교육(3개월 단위 반복 교육), 기초복종과 犬예절훈련(GCDS), 애견상식, GCDS(犬 예절훈련), GCDS 자격증 취득 등이다. 주요 성과로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발견, 부모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보답하고자 장래 목표설정,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긍심 갖고 긍정적 수용생활 등이다.

③ 심리정서 개발 프로그램

첫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수용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 품성을 함양시킴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그의 성과로는 삶의 목적을 발견 및 습관이 변화, 신뢰받는 사람으로 삶의 전환, 가치 있는 삶 발견,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존감 성장 등이다. 둘째, 문화공연 프로그램으로서, 수용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신을 순화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켜 정서순화와 밝은 수용생활 분위기를 조성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주요성과로는 문화적 소양배양으로 사회복귀 능력향상,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재범방지 기여, 출소 후 올바른 청소년으로 사회복귀,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도록 함으로써 교양수준 향상, 수용자간 원만한 관계형성으로 수용생활 안정에 기여 등이다. 셋째, 수용자 예능활동 프로그램으로 예능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안정된 수형생활을 유도하며, 수용자들에게 예술적 감수성회복을 통한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 함양으로 사회적응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성과로는 예능활동을 통한 협동심 함양 및 문화예술의식 고취, 예능적 재능 발견 및

숙련화, 지역청소년문화예술제 참가 등이다.

④ 소년교도소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교도소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서, 청소년의 욕구, 범죄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 청소년 수용자의 범죄유형별 프로그램 미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간 연계 강화, 협의회 운영 및 고용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강화 등으로 조사되었다.

소년교도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목적 및 주요내용, 성과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소년교도소 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구분	사회적응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심리정서계발 프로그램
목적 및 주요 내용	■검정고시 프로그램 ■통신대학교 프로그램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애견치료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문화공연 프로그램 ■예능활동 프로그램
주요 성과	■소양과 지적 능력을 향상 ■사회 적응능력 배양 ■개인별 학습능력향상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발견 ■자긍심 함양 및 긍정적 수용생활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존감 성장 ■사회복귀 능력향상 ■문화예술의식 고취
문제점	■청소년의 욕구, 범죄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청소년 수용자의 범죄유형별 프로그램 미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개선 방안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간 연계 강화 필요 ■협의회 운영 및 고용지원센터 연계(청소년사회복귀 지원 강화)		

3) 범죄청소년의 요구 조사

관련 학생 394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정도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범죄청소년들의 참여경험과 참여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에서 먼저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선택한 상위 5개의 프로그램을 보면, 성교육(83.8%), 학교폭력 예방교육(79.5%), 금연, 금주교육(73.6%), 약물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66.8%), 봉사활동(6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범죄청소년의 범인성의 진단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 중 참여정도가 낮은 하위 5개 프로그램은, 일자리제공(인턴쉽) (22.2%), 취업정보 제공(24.0%), 산업체 현장견학(24.6%), 경제교실(30.2%), 사회성 개발교육(45.3%)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실질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응을 위해 범죄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일이 물론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이와 더불어 성공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귀와 적응을 위해서 제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의 강화를 통해 범죄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자리제공이나 취업정보제공, 경제교실, 사회성 개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프로그램의 다양한 제공과 참여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청소년의 역량이 얼마나 증진되었는가를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로는 제공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가 측정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

성을 위해서는 보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등 효과성 검증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진단해야 하지만 일단은 참여해본 프로그램에 대해 범죄청소년 자신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진단해 볼 수 있다.

참여해 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17개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중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의 면에서 상위 5개의 프로그램을 열거하면, 학과교육(89.1%), 자격증 취득교육(87.5%), 비전 미래 교육 (85.6%), 법교육(83.3%), 취업알선 (81%)이고, 도움정도에서 부정적으로(별로도움이 안된다 +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을 보면, 금연금주교육(31.3%), 산업체 현장견학(29.1%), 학교폭력 예방교육(24.9%), 예술문화활동(23.3%), 교통안전교육(23.3%)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범죄성을 없애기 위한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학과교육과 비전교육, 법교육 등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체로 금연금주나 학교폭력 등 범죄청소년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다. 금연금주나 학교폭력 프로그램 등은 범죄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프로그램들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회적응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프로그램이 잘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여 비율이 높다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만큼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많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2) 경제적 자립(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경제적 자립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10개를 제시하고 이들 프로그램의 참여경험 정도와 프로그램의 도움정도를 질문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개의 프로그램 중 참여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는, 체육특기 활동 (44.1%), 제과제빵 기능사, 요리사(27.7%), 외국어(27.7)였고, 반면 참여경험 비율에 있어 하위 3개의 프로그램은 피아노조율(5.3%), 자동차정비, 중장비기능사(11.5%), 컴퓨터그래픽(12.3%)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가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을 보면, 체육특기(89%), 네일아트와 헤어(85%), 제과제빵 기능사, 요리사(83.3%)이며, 도움정도에서 부정적인 응답비율(전혀도움안된다+별로 도움안된다)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은, 비즈공예(37.7%), 피아노조율(34.7%), 자동차정비, 중장비 기능사(30.4%) 등 이다.

경제적 자립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회적응 프로그램보다는 참여경험과 도움정도의 상응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체육특기활동과 제과제빵, 조리사는 참여경험의 비율도 높으면서 도움이 되는 정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피아노조율과 자동차정비는 참여비율이 낮으면서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참여경험도 높으면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그램들은 더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심리, 정서 계발 프로그램

11개의 심리정서 계발 프로그램의 참여정도와 도움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경험에 있어서는 단지 4.9%정도만이 참여경험을 가진 프로그램에서부

터 81%의 응답자가 참여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높은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보면, 체육활동(80.5%), 개인상담(76.4), 취미활동(75), 심리적성 검사(72.5%)의 순이다. 반대로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프로그램은 모성교육(4.4%), 주말농장, 식물키우기(16.1%), 보호자 교육(21.8), 분노조절, 요가명상(42.6%)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통해 상위 4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위 4개 프로그램(도움이 되는 편+매우 도움의 응답비율)으로서는, 체육활동(90.1), 취미활동(89.9), 독서교육(86.1), 심리적성 검사(81)이고, 또한 하위 4개의 프로그램(전혀 도움이 안됨+도움이 안되는 편의 응답비율)은 모성보호교육(44.0), 주말농장(38.6), 분노조절(25.9), 신앙교육(24.7) 등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 계발 프로그램도 참여경험 여부와 도움정도가 어느 정도는 상응하고 있다. 즉 참여경험의 비율이 높은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체육활동이나 심리적성 검사 등은 참여해본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도 높았고, 참여해 본 결과 도움이 되는 편이거나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로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성교육, 주말농장, 분노조절, 명상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느냐의 질문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도 높았다.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포맷을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범죄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를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적응, 자립지원, 심리정서 계발의 세 측면에서 살펴본 바,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다양하였으나 그 참여비율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정도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다양하였다. 문제는 참여한 비율은 높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

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여 청소년들의 역량증진을 위해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다.

(4)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범죄청소년을 관리하거나 교육시키고 있는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서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범죄청소년들의 참여경험 정도와 도움이 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제공된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영역은 프로그램 특성, 운영방법, 기대효과와 프로그램 담당자(교사)에 대한 평가이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에 대한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내용은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을 제시하였고, 그 질문에 대해 81%정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10명중 2명 정도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간이 기다려지느냐의 질문에는 57.7%가 매우 또는 그런 편이라고 응답함으로써 흥미유발이나 동기유발의 측면에서 조금 더 분발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획일적인 프로그램보다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더 좋으냐는 질문에는 7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개별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약 41%정도가 그렇다는 쪽으로 응답을 하여 청소년들이 원하는 수요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에 대한 평가를 보면 교육시간의 충분성, 교육공간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약 80%가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과제로 남겨진 문제는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교육환경(약 38%)이나 참여에 대한 강요(약 34%)의 문제로 보인다. 자발성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자발성을 확보하고 적어도 강요된 듯한 인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

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의 담당자에 대한 평가이다. 교사의 강의수준이나 교육방법, 그리고 교사 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 교사로부터 무시나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정도로 나타나 프로그램 담당자의 태도에 관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얻거나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반정도에 불과했다. 교육 자체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응답비율도 32% 정도로 나타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개선할 점들이 상당히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준다.

(5) 희망하는 프로그램

자립능력 증진과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을 위한 핵심역량의 세 요소인 도구사용과 사회성 증진 그리고 자율성의 측면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네 가지 프로그램 중 직업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사회체육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법교육 프로그램의 순이었다. 자립을 위해 직업개발 프로그램이 가장 선호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특성상 사회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법교육 프로그램은 범피청소년이어서가 아니라 소양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으로 생각되지만 선호도에 있어서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들의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었으며, 성교육 프로그

램, 신앙교육프로그램, 인성교육(분노조절) 프로그램 등의 순이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분노조절)은 앞서 도움이 되느냐의 질문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는 상당히 높이 나타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문제청소년 선도 및 치료프로그램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경향을 보였지만 프로그램 요구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요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치료 프로그램도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보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포맷과 내용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율성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7개의 제시된 프로그램 중 학업 및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한 것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미래준비활동, 경제문제 해결 프로그램, 자기경영관리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방안

(1)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

범죄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또한 대부분 이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제 활용 가능한 정보나 (직업)역량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대부분 교육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관심, 자발

적 참여와 참여 동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지속적이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적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이의 해결을 위한 재정적인 문제 역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섯째,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중복되거나 공통된 점이 많아 동일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부족하다.

여섯째, 각 기관의 특성이나 대상 청소년(비행이나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의 자립 향상과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있어 청소년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사회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며, 다양한 산학협력관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비행 원인과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성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특히 가정 내에서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자원의 활성화와 환경적 위험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전문적 연계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자립과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퇴소나 처분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지역사회 유관기관(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2) 범죄청소년 요구조사에 따른 개선 방안

범죄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정도,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의 각종요소에 대한 주관적 평가, 그리고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도출된다.

첫째, 범죄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금연 금주교육은 약 80%에 이르는 청소년들이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약 30%정도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제공되어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주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범죄청소년의 범인성과 위기로인(risk factors)-예를 들어 성, 폭력예방, 금연, 금주-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다. 사회적응을 위해 범죄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일이 물론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이와 더불어 성공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귀와 적응을 위해서 제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의 강화를 통해 범죄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자리제공이나 취업정보제공, 경제교실, 사회성 개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범죄청소년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적절히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응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프로그램이 잘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여비율이 높다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그만큼 많이 제공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많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심리정서 프로그램이나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은 사회적응 프로그램보다는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 간의 격차가 비교적 적었다. 따라서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범죄청소년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직업개발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학업 및 진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의 핵심역량의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자율성과 사회성, 그리고 도구 활용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결론

IV.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이라는 측면과 능동적 복지정책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방향과 주요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취약 또는 위גיע층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수립방향 및 주요 내용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아동·청소년계층을 일반 아동·청소년계층, 취약 아동·청소년계층, 위기 아동·청소년계층으로 구분하였고, 각 계층별로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전체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능동적 복지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역량별 정책방향 제시, 그리고 계층별로 세부적인 연구주제별 연구결과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세부적인 전략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련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 역량영역별 주요 정책현황 분석 및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에 대한 분석과 능동적 복지 정책이라는 개념의 관계를 “역량개발을 위한 또는 역량개발에 의한 능동적 복지정책”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특히 최근 논의되는 ‘강점관점’의 복지적 접근과 ‘역량개발’이라는 측면이 상호간에 중첩 또는 보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개발의 영역과 능동적 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공통적 측면에서 정책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표 IV-1>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IV-1>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능동적 복지정책
정책비전과 목표	“자립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행복한 청소년 육성” ▲
(배경)	능동적 복지정책 목표 역량개발 목표 -기본생활 보장 -개인의 성공적인 삶 기반 제공 -자립기회 제공 -사회 기여 능력 배양 -행복한 삶 -종합적 능력 배양
추진방향 및 전략	1. 청소년 역량 영역별, 청소년 계층별 맞춤형 정책 2. 청소년과 국가, 사회가 함께 하는 정책 3. 청소년 자립을 위한 관련 정책의 통합전달체계 확립 ▲
(배경)	능동적 복지의 방향 역량개발의 영역 -생애주기 통합복지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수요자 맞춤형복지 -자율적 행동 영역 -예방적 복지 -지적도구 활용영역 -균형있는 책임복지 -기회확대
	▲ (능동적 복지의 전략) -통합전달체계 형성 -개별화된 전문서비스 -자립지원 -민간의 복지참여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 영역별 관련 복지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표 IV-2>와 같이 제안하였고, 세부적인 역량영역별로 관련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표 IV-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영역과 능동적 복지정책

구 분		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지적 도구 활용
능동적 복지정책 측면	정책 목표	참여하고 배려하는 능동적 아동·청소년 육성	이성에 기초한 자율적 의사결정과 자유의지에 의한 실행력을 갖춘 아동·청소년 육성	지식과 정보, 기술을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
	추진 방향 및 전략	- 영역별 관련 지식, 기술, 태도의 습득에 -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에 기초한 정책의 추진 - 예방과 균형원칙에 따른 정책 추진	기술, 태도의 습득에 참여에 기초한 정책의 추진	기초한 정책 추진
	주요 과제	-관계성 강화 -사회적 협력, 협동 력 강화 -갈등관리 능력 증진	-거시적 맥락에서의 행동 -생애목표 및 과제 수립과 실천 -권리, 이익에 대한 이해와 요구	-언어와 문자 활용 -지식과 정보의 사 회적 활용 -기술의 사회적 활 용

취약계층 중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과 관련되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사업들은 별도의 중앙기구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담당인력의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지역별로 다양한 운영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몇가지 한계점도 분석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서비스 전달에 어려움, 동일한 운영주체(보건복지가족부) 내에 서로 다른 형태의 돌봄사업 운영, 일부 사업의 경우 신고제로 인한 전문성의 한계, 돌봄사업 간의 담당인력 선발기준의 상이성, 담당인력의 근무여건 열악성, 수요·공급에 대한 정밀한 조사분석 없는 시설 설치 등이다.

둘째, 대상 측면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먼저 성과로서 상대적으로 보호가 많이 필요한 초등학교 연령대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청소년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문제로는 중·고등학교 연령대 참여의 어려움, 서비스 대상의 중복과 서비스의 사각지대 존재 등이 제기되었다

셋째,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균형적 성장과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중심의 보육, 복지, 교육, 건강,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사업 목적이 유사하고 그 내용이 중복되거나, 시설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물리적 환경도 열악하며, 특히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기준 및 체계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넷째, 재정 측면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있고,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 예산으로 지자체의 책임감을 고취하였으나, 유사사업 간 재정 지원방식이 상이하거나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관련정책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습역량과 직업역량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해 놓고는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46.4%이며, 미진학·미취업 졸업생의 비율도 전체 졸업생 중 29.2%로 나타나 교육현장에서 사회로 전이하는 단계에서 탈락률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일반고용현황에서도 전국민의 고용률(15-64세)은 63.7%에 이르는 반면, 등록장애인은 43.8%에 불과(50%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사례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의 지원도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지역사회가 가진 다양한 자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인적자원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역동적인 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로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역량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조기 취업을 목적으로 인턴십 등의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이다.

상급학교로의 진학은 대다수의 대안학교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이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은 이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진학으로의 동기부여가 매우 낮기도 하고, 교사인력 등을 볼 때에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대안학교의 목표로 설정할 여건과 능력이 갖추어 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이 진학을 전혀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직접 대학진학이나 기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제도권 학교나 학원과 같은 형태의 교과과정이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공통 주요 교과목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향후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학교복귀를 원하는 경우를 대비하거나, 교양적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실제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를 찾아온 학생들은 처음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학교복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없지만 차차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찾아가면서 마음을 정돈하여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나 학교복귀를 준비하는 과정과 내용을 담아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이다. 제도권 학교를 다니거나 특성화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력이 인정되고, 또 이들은 진학을 목표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수학능력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아 졸업하게 되면 직업을 얻는다. 그러나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고, 직업능력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안학교에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하여 책무는 인식하고 있지만, 이들이 사고만 치지 않도록 묶어두는 의미정도로만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들의 역할을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 대안은 다름 아닌 바로 직업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일이다.

범죄청소년의 자립역량과 관련된 프로그램 분석과 대상청소년의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또한 대부분 이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실제 활용 가능한 정보나 (직업)역량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대부분 교육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관심, 자발적 참여와 참여 동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셋째, 지속적이고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교육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이의 해결을 위한 재정적인 문제 역시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와 문제점이다. 다섯째, 자립지원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중복되거나 공통된 점이 많아 동일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2. 결론 및 정책 제언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읽고, 쓰고, 말하는 기초 능력 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 갈등 해결력, 창의력 등의 역량 함양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DeSeCo 프로젝트에서 핵심역량을 “생활전반을 통틀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능력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순기능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 개인적 수준에서는 일차적인 욕구 충족, 타인과의 관계 형성, 성취와 만족,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 고용, 정치 참여,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수준에서는 평화와 안녕, 경제적 성취와 부, 사회적 통합, 평등, 인간권리, 환경 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OECD, 2005).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와 능동적 복지정책의 관계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역량 강화를 위해, 또는 역량강화를

통해 추진해야할 능동적 복지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복지에서 과연 능동적 복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능동적 복지의 의미, 능동적 복지의 특성, 능동적 복지의 방향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능동적 복지라는 개념을 세부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적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은 주로 요보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시설 보호가 주안점이었다(김정원 외, 2008). 그러나 일반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자기 가정의 보호를 받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아동·청소년복지의 초점이 가정을 벗어나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목표로 하는 대신 개별적 서비스 중심 혹은 보편적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복지사업과 통합이 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복지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통합복지정책이란 교육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역의 프로그램을 아동·청소년에게 연결시키는 것,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선별하고 다양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에 대응하는 것 등을 말한다(김정원 외, 2008). 이러한 통합복지정책의 강화는 통합복지정책이 취약 아동·청소년들이 교육의 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집단과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스스로 체화할 수 있고, 활용 가능한 교육적 경험을 가질 수 있어 우리 사회의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인 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 교육적 지원이 취약한 계층의 자녀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아동·청소년의 지적, 정의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역할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지적, 정의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역할까지 지역사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총체적 교육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청소년복지 담당인력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라는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과 같은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혹은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일반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문영역의 관련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 주기적인 직무연수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역량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적인 행정지원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 지역, 시·도, 중앙 단위에서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한 유기적인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교단위에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담당부장과 담당교사를 배치하며 민간 실무인력을 배치하여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관련 정보를 축적하며 학교 내외의 여러 자원과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단위에서는 국가수준의 복지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의 아동·청소년복지 전담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수준의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 하여 관련 사업을 중앙단위에서 조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가운데 추진된 정책들을 모니터링 평가하며 그 성과를 분석하여 그에 기초한 아동·청소년복지 정책을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역량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김기현 외(2008) 연구결과를 토대로 3가지 형태의 역량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지만,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분

야의 개발 역시 필요하다.

취약 또는 위גיע층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관련된 능동적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전달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며, 각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중앙기구를 통합하여 중앙 및 시·도 단위에 설치해야 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수요·공급의 정밀한 조사와 분석 후에 필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수행기관을 확대·설치해야 한다.

둘째, 대상자와 관련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별도구를 개발해야 해야 한다. 또한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경우,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각 시설별로 대상자의 욕구와 서비스의 효과 및 만족도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재정부분과 관련하여, 국고 및 지방비는 면밀한 현실분석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에 대한 적절한 표준예산을 산출해야 하며, 사업특성별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장애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실태에 근거하여 건강하게 장애아동·청소년이 생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실태조사 분석에서 장애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으로 ‘친구 및 선생님의 이해부족, 놀림, 편견’ 등을 제시한 것, 그리고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주위 시선 때문’이라고 한 것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인식개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장애인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여 통합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경제적 지원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22.4%였는데, 이는 장애인 전체 평균 수급비율인 19.1%보다 높은 비율로 장애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태분석에서 주된 장애에 대해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지 않은 주된 이유가, 그리고 문화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경우가 많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초등학교 장애아동 층에서 더 많았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연령층의 장애아동·청소년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학교생활 지원이다. 장애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수업내용의 이해’가 가장 어렵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아동·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시 되는데, 이는 가정방문 학습도우미나 특수교육보조원등을 확대배치 하는 것으로 이야기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방문 학습도우미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욕구는 전체 장애아동·청소년의 약 80%가 무료든 유료든 희망하고 있었다. 이외 가정에서 학교로,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내외 편의시설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이다. 장애아동·청소년들의 문화여가활동으로는 ‘TV 및 비디오 시청’과 ‘컴퓨터게임·인터넷검색’ 등이 주를 이루었고, 그 외에 ‘스포츠 활동’이나 ‘여행 및 문화예술 관람’ 등의 활동은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여행, 스포츠 활동, 창작적 취미활동 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의 여가문화활동 등이었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도록 구체적인 욕구실태 파악과 더불어 이에 따른 다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취업 연계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들이 고등교육 이후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취업을 위한 준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령기부터 직업적성을 개발하고 직업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장애아동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의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효과적인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정책방향 선택은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의 내용은 수요자 측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정책방향은 비록 직업능력의 개발로 맞추어져 있지만, 상급학교로의 진학의 길은 항시 열어 놓고 이를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의 실천 가능성과 효과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제이기도 하고, 정책의 전략 요소들을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중앙과 지방정부 관계부처의 인식과 의지, 관계부처 간 연계·협력, 교사의 양적 및 질적 확보, 지역사회 민간기업 및 단체의 참여 및 지원,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진학 가능한 학력인정, 직업역량개발 전문가 인력풀(pool), 직업훈련을 위한 인턴십센터 개설 및 운영, 기업 및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학생 및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유도, 위센터(Wee center)와 연계 직업훈련 Wee school 대안학교로의 전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다.

범죄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범죄 청소년들의 자립향상과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서는, 첫째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역량개발 프로그램에 있어 청소년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사회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며, 다양한 산학협력관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비행 원인과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성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특히 가정 내에서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통해 자립역량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범죄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그들의 ‘문제’ 또는 ‘범인성’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잠재적 자원으로서의 그들의 역량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대안교육백서 1997~2007. 교육인적자원부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한국청소년 행복·역량지수 개발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국가청소년위원회
- 권일남 외(2008).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영역분류 및 교급별 대표 프로그램 개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김기현 외(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승권 외(2008a). 2008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결과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드림스타트지원단.
- 김승권 외(2008b). 보건복지정책 중장기 추진 전략.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신영 외(2006). 청소년발달지표조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신영 외(2007). 청소년발달지표조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안나 외(2003).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 외(2008). 교육복지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철, 김신영(2005). 청소년개발지표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08).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정부.
- 박종돈 (2007). 새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추진방향. 보건복지포럼, 134, 2-3
- 백선희(2006). 영국의 국가아동전략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 방안 모색: Sure Start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7.
- 보건복지가족부(2007). 보건복지가족부 백서.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8a).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8b).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 정책: 2009년 업무보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8c). 2008 아동·청소년백서.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8d). 미래세대 희망플랜 :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a). 2009년도 아동·청소년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b). 2009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안). 보건복지가족부.
- 소경희(2007a).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소경희(2007b). 캐나다 퀘벡주 교육과정 개혁 사례 고찰: 역량기반(competency based)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 비교교육연구, 17(4), 105-128.
- 오해섭 외(2008), 청소년 글로벌역량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태용(2007). 역량(Competency)의 개념. 중앙인사위원회. 여름호. 71-75 .
- 유현숙·김안나·김태준·김남희·이만희·장수명(2002).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김태준·이석재·송선영(2004). 국가수준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 윤명희·김진화(2007).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결과보고서.
- 윤철경 외(2008),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정책방안 연구 : 글로벌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주(2008).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발전방향. 경기도인재개발원.
- 이석재·장유경·이현남·박광엽(2003). 생애능력 측정도구 개발연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원 외(2009), 아동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아동복지학 28호
- 천정웅·이용교(2007). 적극적 관점의 아동청소년복지. 인간과 복지.
- 최창욱·조혜영(2007).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권 확보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2008), 능동적 복지정책과 지역복지 활성화 전략.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도구 활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한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8-23-03(연구보고 08-R15-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enjamin S. Bloom. (1956). *Taxonomy of Education Objectives Handbook I : Cognitive Domain*.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 Boyatzis, R. E. (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Wiley.
- Candy, P. C. (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Christe, G. (1999). Perspektiven benachteiligter Jugendlicher jenseits des regulären Arbeitsmarktes und traditioneller Berufsorientierung. Fähigkeiten und Kompetenzen für Alltagsbewältigung. in *Evangelische Akademie*(1999). *Jugendberufshilfe im Dilemma*.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 Deakin, B. M. (1996). *The youth labour market in Britain: the role intervention*. Cambridge: the Univ. of the Cambridge Press
- Dearden, R. F. (1976). Autonomy as an educational ideal I. In S. C. Brown(Ed.), *Philosophers discuss education*. London: Macmillan.
- Evangelische Akademie (1999). *Jugendberufshilfe im Dilemma*. Stuttgart: Ernst Klett Verlag
- Garbarino, J. (1985). *Adolescent development: An ecological perspective*. Columbus, OH: C. E. Merrill.
- Marzano, R. (2000). *Designing a new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Marzano, R. (2006). *The new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 Patridge, Y. M. (1979). *Personal autonomy and compulsory liberal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Rogers, C. R. 1983). *Freedom to learn for the 80s*. Ohio: Merrill.
- Rychen, D & Slganik, L. (2001). *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Rychen, D & Slganik, L. (2002). *DeSeCo Symposium: Discussion Paper*. OECD.
- Rychen, D & Slganik, L. (2003).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a well-functioning society*. Cambridge: Hogrefe & Huber Publishers.
- Spencer, L. & Spencer, S.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가나다 순)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양빈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이주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최병훈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한도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

◆ 연구보조원 ◆

서은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보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 · 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 · 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 · 안선영 · 이계오 · 이미리 · 김성식 · 김명희 · 박일혁
- 09-R02 아동 · 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 · 김영애 · 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 · 김성언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 · 송병국 · 김혁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 · 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 · 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 · 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 · 조손가정 아동 · 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 · 이용교 · 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 · 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 · 김영인
- 09-R10 아동 · 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 · 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 · 설수영 · 원형중 · 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청소년 진로 · 직업 지표 / 최인재 · 김봉환 · 황매향 · 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Ⅳ : 아동 · 청소년 활동 · 문화 지표 / 임지연 · 김정주 · 김신영 · 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 · 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 · 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Ⅳ : 생존 · 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 · 천정웅 · 신승배 · 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김진호·임성택·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임영식·문호영·김남정·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김동일·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윤옥경·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오해섭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박은혜·이상훈·최은영·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조흥식·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정대영·황순영·김영미·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박현옥·이경숙·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김원경·고정욱·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이근매·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김나라·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고력
영역 /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
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해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운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운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아·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아인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디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종합보고서 -

인 쇄 2009년 12월 23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제·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801-4

ISBN 978-89-7816-800-7 (세트)